



주간통일정세 2010-14(2010.03.29~04.04) 발행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주소 서울시 강북구 419길 275 통일연구원 (우) 142-728
전화 02) 900-4300 전송 02) 901-2547
E-mail webmaster@kinu.or.kr http://www.kinu.or.kr

주간 통일정세

2010-14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2. 대외정세 3. 대남정세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가. 정치

- 北단동 영사지부 ‘金위원장 방중 모른다’(3/29, 연합뉴스)
 - 단동 영사지부 관계자는 이날 사무소를 방문한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김 위원장의 방중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우리 같은 사람은 전혀 알 수가 없다”고 함.
 - 이 관계자는 “우리는 그저 심양 총영사관에서 하는 사증 발급 업무만 할 뿐 다른 일은 전혀 알지 못한다”면서 “그런 건 베이징(北京)에 서나 기자들이 더 잘 알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함.

- 北김정일, 류홍차이 신임 중국대사 만나(3/30, 조선중앙통신)
 - 통신은 “김정일 동지께서 새로 부임해온 류홍재 특명전권대사를 환영하고 그와 따뜻한 담화를 했다”며 “신임특명전권대사를 위하여 만찬을 마련했다”고 밝힘.
 - 김정일 위원장은 “북·중 우호 관계는 양국 선대 혁명가들이 손수 맺어 키워온 것”이라면서 “역사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반드시 한 단계 더 강화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
 - 만찬에는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 김영일 당 국제부장 등이 배석된 것으로 소개되었으며, “만찬회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고 보도

- 北김정일 3일밤 동선…이례적 ‘시점 공개’ 왜?(4/4, 연합뉴스;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류홍차이(劉洪才) 신임 중국 대사의 부임을 축하하기 위해 ‘3일 저녁’ 열린 연회에 김 위원장이 참석했다고 4일 오전 0시45분 전함.
 - 북한 언론매체들은 김 위원장의 공개활동에 대해 통상 만 하루 이상 지난 뒤 구체적인 날짜와 시간을 언급하지 않은 채 그 내용만 보도하며, 김 위원장의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북한 언론매체들의 이 같은 보도 원칙은 1998년 ‘김정일 체제1기’ 출범 이후 거의 예외 없이 지켜져 옴.
 -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조선중앙통신의 보도 자체가 파격이며, 당일 자정을 넘기고 1시간도 안 돼 보도한 타이밍도 매우 주목할 만하다는 것이 북한 전문가들의 지적
 -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구체적인 장소를 언급하지 않은 채 관련 기사



를 보도했으나 신화통신은 연회가 개최된 장소를 평양이라고 명시

- 단둥 도착한 北열차는 화물열차(4/3, 연합뉴스)
 - 3일 새벽 중국과 북한 국경을 통과, 북한 접경 지역인 단둥(丹東)에 도착한 북한 열차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탄 특별열차가 아니라 화물열차인 것으로 파악
 - 3일 단둥과 선양의 소식통들은 “오늘 새벽 단둥에 도착한 열차가 검은색이었던 점으로 미뤄 신의주와 단둥을 오가는 화물열차인 것으로 보인다”며 “여객열차는 파란색이어서 화물열차와 구별된다”고 밝혔다.
 - 통상 김 위원장의 특별열차는 단둥 역에 도착한 뒤 중국 측 인사들의 영접을 받고 베이징으로 출발하는데 이날 새벽 열차가 단둥 역에 정차했을 당시 역 주변에 영접 인파가 전혀 없었으며 압록강 철교나 역 주변의 경계도 강화되지 않았다는 게 목격자들의 전언

[김정일 방중 동향]

○ 김정일 방중 임박, 시기의 적절성

- 북한
 - 4월 9일 최고인민회의 개최
 - 15일 북한의 최대 명절인 태양절(김일성 전 주석의 생일) 시작
- 중국
 - 4월 3일 청명절 연휴 시작
 - 10일 중국지도부는 하이난성에서 열리는 보아오포럼 참석
 - 11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핵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할 예정

○ 김정일 방중 관심의 초점

- 중국의 경제원조, 북한의 북핵 6자회담복귀, 후계자로 알려진 김정은(3남) 동행여부

○ 북한-중국 동향

- 호위총국 인사 10여명 고려항공편으로 3월 30일에 베이징 도착
- 경호요원으로 추정되는 20여명 같은 날 평양발 국제열차 편으로 베이징 도착
- 외유중인 중국 최고지도부 속속 베이징으로 돌아오고 있음.
(중국 최고지도부 내에서 북한을 담당하고 있는 시진핑 국가 부주석이 31일 오전 동유럽 순방을 마치고 베이징으로 돌아왔고, 서열 4위인 자칭린 중국정치협상회의 주석도 1일 아프리카 방문을 마치고 귀국함.)

○ 남한정부 입장

- 확정적인 정보는 없지만 접경지역 상황과 각종 첩보를 바탕으로 김 위원장의 방중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살피는 상황, 정황상 상당히 임박한 것으로 전망



- 김 위원장이 최근 북·중 접경지역과 가까운 평안북도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시점을 잡아 특별열차 편을 이용해 국경을 넘어갈 가능성 존재

○ 단둥지역 소식통 의견

- 통상 김 위원장이 탄 열차가 국경을 통과하기 2~3일 전부터 단둥역 주변 경비가 강화되고 폭발물 수색작업 등이 이루어지는데, 아직 그런 조짐이 전혀 없다고 전함.
- 며칠 전부터 신의주와 통신 연락이 끊겼으며 모종의 움직임이 있는 분위기라고 전함.

○ 김정일의 예상 방중 루트

- 2007년 김 위원장이 신의주까지 갔다가 되돌아 온 경험 존재, 방중계획이 노출됐다면 일정을 바꾸거나 취소할 가능성 존재
- 신의주-단둥 루트에 너무 언론의 관심이 집중돼 우회로로 중국에 갈 가능성이 상당히 존재

○ 남한 대북 전문가가 분석한 김정일 방중 의도 및 목표

- 북한은 식량문제를 통한 경제 지원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의 통 큰 경제 지원이 절실
- 중국의 경우 경제적 지원을 통해 6자회담 복귀 약속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기에 김 위원장의 방중에 적극적
- 김 위원장의 방문은 2000년, 2001년 때처럼 ‘개혁·개방’이 아닌 ‘체제 안전’의 목적. 현재 김정일의 최대 관심사는 중국을 안전판으로 삼아 체제를 공고하게 만드는 문제일 것임.
- 북은 천안함과 무관하니 예정된 일을 할 뿐이란 메시지를 주려는 것
- 천안함 침몰에 북한이 연루됐을 것으로 보는 국제사회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방중을 결정
- 예정된 방중을 미루는 것이 오히려 천안함에 대해 ‘도둑이 제 발 저린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고 판단했을 가능성 존재

■ 김정일동향

- 3/28, 국립교향악단 공연 관람(3/28, 중통)
 - 최태복·김기남(黨 비서), 김경희·장성택·김영일·김양건(黨 부장), 강석주(외무성 제1부상) 등 동행
- 4/2(예상) 만수대예술단 공연을 관람(4/3, 중방)
 - 김영춘(인민무력부장), 김정각(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 최태복·김기남(당 중앙위 비서), 김경희(당 경공업부장) 등이 동행

■ 기타 (대내 정치)

- ‘선군시대 전국 과학자, 기술자대회’ 참가자들, 수산기념궁전 참배 (3/30, 중통)



나. 경제

- 印프라모드 미탈 글로벌스틸홀딩스 회장 방북(3/29, 조선중앙통신)
 - 통신은 “프라모드 미탈 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인도 글로벌강철주식 회사(인도 글로벌스틸홀딩스) 대표단이 도착했다”고 전함.
 - 하지만 방북일정과 목적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음.

- 北, 1·2월 中서 2억3천만 달러 수입, 작년비 30% ↑ (3/30, 미국의 소리 (VOA))
 - 북한이 올해 1~2월 중국에서 물자를 수입한 액수가 작년 동기보다 30% 많은 미화 2억3천만 달러에 달했다고 VOA 방송이 30일 중국 상무부 자료를 인용해 보도
 - 월별로 1월 수입액은 1억1천200만 달러로 작년 동월 대비 31%, 2월 수입액은 1억1천700만 달러로 28% 증가했다고 방송은 전함.

- 北학자 “화폐개혁 이후 혼란 없었다”(4/1, 연합뉴스)
 - 북한 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의 리기성 교수는 APTN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외부에서 많은 사람이 우리나라의 환율 변동 기간 발생한 문제들에 관해 시끄럽게 말해왔지만 그들이 말한 바와 같은 사회 불안은 없었다”며 “몇몇 조치들에 힘입어 이제 상황이 전반적으로 안정되고 있으며 경제도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말함.
 - 또한 리 교수는 “환율 변동 직후 초기에는 시장 가격이 고정되지 않아 며칠 동안 시장이 폐쇄됐지만 이제는 모든 시장이 열려 인민들이 시장에서 생필품을 사고 있다”고 전하면서 “북한 정부의 목표는 시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폐지하고 국가가 통제하는 배급 체제를 통해 인민들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강조

- 북·중, 압록강에 수력발전소 착공(4/1, 교도통신)
 - 통신은 북한과 중국 지린성(吉林省) 지안시(集安市)가 합작으로 압록강 상류인 임토와 문악 등 2개의 수력발전소를 건설에 착수했다고 보도
 - 31일 지안시에서 열린 착공식에는 북한 전력공업성의 김만수(金万壽) 전력공업성 부상 등 대표단이 참석함.

- 北, 1월 평균 영하 15.9도 혹한지서 키위 재배?(4/1, 조선중앙통신)
 - 통신은 지난달 31일 “조선(북한)에서 식용열매가 달리는 왕다래(키위) 나무 번식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면서 “중앙식물원 연구 집단(팀)이 합리적인 왕다래나무 야외 접 번식 방법을 찾아내 전국 여러 곳에 도입했고, 최근에는 자강도 강계시 등에 번식시켜 왕다래 나무가 기온이 낮고 생육조건도 불리한 북부 내륙까지 퍼지게 됐다”고 밝힘.



- 또한 지난달 17일 북한의 '조선기록과학영화촬영소'가 키위나무 재배의 기술적 문제를 다룬 '왕다래나무를 많이 심자'는 타이틀의 과학 영화를 제작했다고 전하기도 함.

- 中지방정부, 北 잇는 교량건설 '경쟁'(4/2, 연합뉴스)
 - 동해 진출과 북한 자원개발 확보에 적극적인 중국의 지방정부들이 북한을 잇는 교량 건설에 경쟁적으로 나섬.
 - 중국 지안(集安)시는 (단둥, 훈춘, 투먼에 이어) 현재 압록강 너머의 북한 만포시와 연결하는 교량 건설도 추진 중
- 英석유회사, 北동해 유전개발 재추진(4/2, 연합뉴스)
 - 2004년 북한과 동해 유전 개발 계약을 맺었으나 사업을 진척시키지 못한 영국의 석유 개발회사 아미넥스(Aminex)가 다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뜻을 밝힘.
 - 아미넥스는 2일 자사 홈페이지에 공개한 '2009년 경영성과 예비 보고서'에서 "현재 북한 측과 동한만 분지의 원유 생산 분배 협정을 수정·보완하는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상반기 안에 서명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힘.
- 北, 함흥도 외국인 관광객에 개방(4/3, 연합뉴스)
 - 북한 관광을 전문으로 하는 중국 고려여행사는 3일 홈페이지에서 "지난 1월 북한이 미국인에 대한 관광 제한 조치를 풀면서 함흥도 모든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개방했다"고 밝히면서 오는 8월7일 첫 함흥 관광에 나설 관광객의 모집에 나섬.

■ 기타 (대내 경제)

- '제6차 전국 기계설계부문 과학기술전시회', 3.23~25 평양에서 진행 (3/26, 중통)
- 北 국가과학원, '대형 전자현시판' 개발 도입(3/26, 중통)
- 인도 글로벌강철주식회사 대표단, 평양 도착(3/29, 중통)
- 北-이탈리아 합작회사 《고리탈(CORITAL, 2009년 4월 창설)》, "평양시에서 식당과 상점 운영으로 시민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 보도(4/1, 조선신보)
- 소말리아 해적 공격받은 北선원 케냐서 치료(4/3, 몸바사(케냐) AFP=연합뉴스)

다. 군사

- 北방송 '한·미 23일부터 수일간 서해서 군사연습'(3/29, 조선중앙방송)
 - 방송은 "지난 19일 평택항에 기어든 미제 침략군 해군 이지스 구축함 2척과 괴뢰해군 구축함 세종대왕호를 비롯한 전투함선들이 23일



부터 수일간에 걸쳐 대함 및 대공사격훈련, 해양차단작전 등을 본격적으로 감행했다”고 전함.

- 또한 “미제와 남조선 괴뢰 호전광들이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의 일환으로 조선서해 해상에서 북침전쟁연습에 광분했다”, “미제와 괴뢰군 부호전광들이 무모한 북침전쟁도발 책동으로 인해 조선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고 보도

라. 사회·문화

■ 기타 (대내 사회·문화)

- 北 올림픽팀 대표단(정인철 체육지도委 부위원장), ‘제7차 겨울철아시아 경기대회 선수단 단장회의’(카자흐스탄) 참가차 평양 출발(3/27, 중통)
- 北, 4.1 태양절 즈음 지식인들에 대한 ‘국가학위학직’ 수여식 진행(4/1, 중통)
- 평양서도 피자, 스파게티 인기(4/2, 조선신보)

2. 대외정세

가. 일반

- 阿방문 北김영남…中과 접촉없어(3/29, 연합뉴스)
 - 베이징의 한 소식통은 29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27일 밤 베이징에 왔다가 28일 아프리카로 떠났으며 베이징 소재 북한대사관에서 숙박했다”, “김 상임위원장이 중국에 머문 시간이 짧아 중국 측과 그 어떤 만남도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전함.
 - 앞서 27일 조선중앙통신은 김 상임위원장이 가봉, 감비아, 세네갈 등 아프리카 3개국을 방문하기 위해 특별비행기로 평양을 출발했으며 최창식 보건장, 김형준 외무성 부상, 리명산 무역성 부상 등이 수행했다고 보도
- 최병관 주중 北대사 내달 중순 부임(3/29, 연합뉴스)
 - 베이징의 한 소식통은 “현 최진수 대사가 아직 베이징에 체류 중이며 4월 중순 새 대사가 올 것으로 보인다”고 전함.
 - 신임 최 대사는 북한 외무성의 부부장(차관) 급으로 영사국장을 두 차례 역임한 것으로 알려짐.
- 北김영남, 가봉 대통령과 회담(3/31, 조선중앙통신)
 - 통신은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가봉 대통령부에서 진행된 회담에서 쌍방은 양국 간 친선 유대를 공고히 하고 쌍무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 데 대해서와 호상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의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함.



- 北리철 제네바 대사 3월말 이임(4/1, 연합뉴스; 대공보(大公報))
 - 대공보는 리여우치(李幼岐) 명의의 논설을 통해 30년간 스위스에서 외교관 생활을 해온 리철 대사가 김정일 위원장의 셋째 아들인 김정은(27)으로의 권력 승계 준비작업을 돕기 위해 최근 평양으로 귀환했다고 전함.
 - 리 대사는 1980년 제네바 주재 북한대표부 공사로 부임하며 제네바와 첫 인연을 맺은 뒤 북한이 유엔에 가입하기 전인 1987년부터 제네바 UN사무국 주재 상임대표부 대사로 활동했으며 1998년부터는 주 스위스 대사를 겸임했으며, 정남(39), 정철(29), 정은 등 김 위원장의 세 아들이 스위스에서 국제학교와 공립학교를 다니는 동안 후견인 역할을 해온 김 위원장의 핵심측근으로 알려짐.

■ 기타 (대외 일반)

- 김영남, 3/28 아프리카 가봉·감비아·세네갈 공식 巡訪차 평양 출발(3/27, 중통)
 - 최창식 보건상, 김형준 외무성 부상, 리명산 무역성 부상 등 수행
- 박익춘 외무상, 駐北 파키스탄 신임대사(아리프 마흐무드)와 담화(3/29, 중통)
- 北 김영남, 3/29 가봉공화국 도착 및 「뿔 비오그 음바」 수상 의례방문(3/30, 중통)
- 김영남, 3/30 러시아 철도테러 관련 同國 대통령에게 위문 전문(3/30, 중통)
- 北-가봉, 3/30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과 '외무성 사이의 협조에 관한 의정서' 「리브르빌」에서 조인(3/31, 중통)
- 쿠웨이트 동물원, 김정일에게 아프리카 사자·단봉야대(낙타)·갈기양·사자돌원숭이(망토원숭이) 등 희귀동물 6종 22마리 '선물' 전달(3/31, 중통)
- 北 김영남, 감비아 대통령 회담... 친선협정(4/4, 중통)
 - 2일 감비아를 방문해 야야 자메흐 대통령과 회담하고 각종 협정을 체결
 - '친선·협조에 관한 협정', '정부들 사이의 공동위원회 창설에 관한 협정', '여러 분야에서의 기술협조에 관한 협정'을 각각 조인
 - "조선반도와 아프리카에서 평화와 안전, 진보를 저해하는 온갖 요소들에 반대하는 데 협력하며 평화 없이는 안정이 이룩될 수 없다"는 공동 코뮌니케를 발표

나. 6자회담(북핵)

- 北통신 '2010년대에는 자체 핵연료로 경수로 가동'(3/29, 조선중앙통신)
 - 통신은 남한과 미국에서 대북정책으로 제기되고 있는 '기다리는 전략'을 거론하면서 "2010년대에는 자체의 핵연료로 돌아가는 경수로 발전소가 우리의 대담으로 될 것"이라고 밝힘.



- 통신은 ‘메가폰 전쟁의 검은 내막’ 제목의 기사에서 “미국이 ‘악의 축’과 ‘핵 선제공격’을 운운하면서 시도한 ‘기다리는 전략’에 우리는 두 차례의 핵실험과 ‘광명성 2호’의 성공적 발사로 대답했다”고 말함.
 - 북한은 작년 4월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 “경수로발전소 건설을 결정하고 첫 공정으로 핵연료를 자체로 생산보장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지체없이 시작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음.
- 北홍선옥 “6자회담 부진은 북·미간 불신 탓”(4/4, 조선중앙방송)
 - 국제의회연맹(IPU) 총회에 참석한 북한 홍선옥 최고인민회의 부의장은 “6자회담이 지지부진하고 있는 것은 조(북)·미 사이의 신뢰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고 보도
 - 홍 부의장은 “현 시기 조선반도(한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전보장에서 나서는 근본문제는 조미 사이의 적대관계를 종속시키는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

3. 대남

- 北민경련 ‘침몰사고 北연관…어이없다’(3/31, 연합뉴스)
 - 북한의 대남 경제협력 공식창구인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가 천안함 침몰과 북한과의 연관성이 거론되는 데 대해 북한의 공식기관으로서 처음 입장을 밝힘.
 - 민경련 단둥(丹東)대표부의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서해안 초계함 침몰 사고에 대해 중국 현지인들의 이야기 등을 통해 알고 있다”면서 “왜 남측은 그것을 우리하고 자꾸 연관을 시키느냐”, “서해안에서 발생한 일이라면 중국도 있고 일본도 있는데 왜 우리하고만 연관이 있는 쪽으로 몰아가느냐”며 입장을 전함.
- 北신문 ‘한·미, 북침전쟁 하면 수장할 것’(3/31, 노동신문; 우리민족끼리)
 - 노동신문은 31일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을 ‘북침전쟁연습’으로 규정하면서 “미제와 남조선 괴뢰호전광이 북침전쟁의 불을 지른다면 우리 군대와 인민은 적개심과 멸적의 의지로 복수의 불벼락을 들썩워 침략의 무리들을 바다에 수장해 버리고 말 것”이라고 밝혔다고 우리민족끼리가 전함.
 - 신문은 ‘북침항로로 질주하는 침략선’ 제목의 글에서 “이미 폭로된 것처럼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은 미제와 남조선 괴뢰군부호전세력이 우리 공화국에 대한 불의의 핵 선제공격작전을 숙달, 완성하기 위한 북침전쟁연습”이라며 “침략선의 항로가 어디겠는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고 말함.
 - 또한 “연습의 내용만 보아도 그들의 공격목표는 명백히 우리 공화



국”이라며 “북침항로를 잡은 전투함선들을 통해 이 땅에서 과연 누가 평화를 파괴하고 대결을 추구하는 장본인인가 하는 것을 다시금 똑똑히 알 수 있다”고 덧붙임.

- 中연변, 한국인 연루된 北마약조직 검거(3/31, 연합뉴스; 흑룡강신문)
 - 연변 공안국 마약 수사대는 지난해 9월 조선족 김모씨가 북한의 ‘장 사장’으로부터 마약의 일종인 히로뽕을 사들여 칭다오(靑島)와 한국 등에서 판매한다는 첩보를 입수, 수사에 착수해 최근 차모씨를 비롯한 한국인 2명과 북한인 5명, 조선족 1명 등 모두 8명으로 구성된 마약조직을 검거했다고 보도
 - 공안국 수사 결과 두목인 장 사장을 비롯해 북한인 5명이 운송책임이 마약조직은 북한에서 들여온 히로뽕을 연변 화룡(和龍)시 난핑(南坪)진 등 북한과 중국 국경지대에서 조선족 김씨 등에게 넘겨 칭다오로 운반한 뒤 차씨 등 한국인 운송책을 통해 국내로 반입한 것으로 드러남.
- 北 “南, DMZ서 포사격”…군당국 “사실무근”(4/4, 조선중앙TV; 연합뉴스)
 - ‘천안함’ 침몰과 관련해 북한이 10일째 침묵을 지키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군이 4일 DMZ 안에서 북한 측 초소를 향해 포사격을 했다고 조선중앙TV가 주장
 - 우리 군 당국은 이에 대해 “지휘통제실에 확인 결과 지금까지 그런 사실(포사격)은 없다고 한다”고 밝힘.

[北 DMZ…판문점대표부 대변인 담화]

○ 사건의 발단

南 국방부 6·25전쟁 60주년사업단과 육군본부 등은 지난 2월 국방부 출입 15개 언론사와 ‘DMZ 취재 지원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공동으로 체결, 6·25전쟁 60주년을 기념해 최초로 DMZ지역을 언론에 공개하고 군사시설과 생태·환경 등을 취재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기로 결정

○ 북측의 담화문 내용

- 남한당국이 DMZ에서 견학·취재 허용 등 ‘반공화국 심리전 행위’를 하고 있음.
- DMZ를 북남 대결에 악용하려는 미국과 남조선 당국의 그릇된 행위가 계속된다면 이 지대에서 인명 피해를 비롯한 예측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게 될 것
- DMZ의 안전 질서를 파괴하는 그 어떤 행동도 허용할 수 없으며 그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 측이 지게 될 것
- 남조선 군부 호전세력은 우리 군대의 예상할 수 없는 불벼락을 면하려고 든 DMZ를 반공화국 대결장으로, 대북 심리전장으로 만들려는 계획을



당장 철회해야 함.

- 미국 측이 정전협정 조인 당사자로서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에 관심이 있다면 DMZ의 안전 질서를 파괴하려는 책동을 당장 중지시켜야 함.

○ 북에 대한 남측 당국자 반응

- 언론의 취재활동이 정상적 승인 절차를 거친다면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음.
- 북한의 위협이 나온 만큼 DMZ 내 안전 문제 등을 종합 검토해 결정할 것임.
- 북한이 천안함 침몰 사건 외중에 느닷없이 DMZ를 걸고 나온 것에 대해 자신들이 천안함 사건과 관련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판청 피우기' 전략으로 분석
- 천안함 침몰로 NLL부근에서 고조된 긴장을 DMZ까지 확산시키려는 의도로 분석
- 북의 담화에 대응할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함. 천안함 침몰 사고와 전혀 상관없는 통상적인 대남 비방으로 분석
- 북한의 이번 담화는 DMZ 취재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로 추정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美, '北 핵보유국' 암묵적 인정?>(4/1)

-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면서도 최근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주목됨. 특히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30일(현지시간) 캐나다에서 열린 G8(주요8개국) 외무장관 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불량국가들로부터 발생하는 위협을 언급하면서 북한의 핵보유를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음.
- 클린턴 장관은 미국과 러시아 등이 직면한 위협을 언급하면서 “우리는 이미 핵무기들을 가진 북한과 같은 불량정권으로부터 오는 새로운 위협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음.
- 클린턴 장관은 이란과 북한을 명확히 구분했음. 북한에 대해서는 핵무기를 가진 것으로 묘사한 반면 이란에 대해서는 “핵무기 개발을 분명히 추진하는”국가로 언급했음.
- 이는 미국이 북한과 이란의 핵개발 상황에 대해 분명한 평가의 차이를 두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임.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할 역량을 갖고 있음을 최근 거듭 천명해 왔음.
- 매튜 버로우 미 국가정보국(DNI) 산하 국가정보위원회(NIC) 분석국장은 지난달 브리핑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생산했는지 여부는 모르지만,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음. 클린턴 장관의 이번 언급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공식 인정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클린턴 장관이 전문 외교관이 아닌 정치인 출신이라는 점에서 이번 발언이 의도적으로 계산된 발언은 아닐 가능성이 높음. 미국은 그동안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해 왔음.
- 데니스 블레어 DNI국장은 지난달 “김정일은 미국과 국제사회로부터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기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우리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결코 인정할 수 없다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음.
-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지난해 6월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한국을 방문한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명예 사무총장이 지난 12일 “나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다”고 말하는 등 미국과 엇갈린 국제사회의 반응도 나오고 있음.



● G8 외무장관, 北 6자회담 복귀 촉구(3/31)

- 주요 8개국(G8) 외무장관들이 30일(현지시간)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촉구했음. 로런스 캐논 캐나다 외무장관은 이날 캐나다에서 이틀간의 세계안보 관련 회의를 마친 뒤 G8 외무장관 공동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음. G8 외무장관들은 북한과 이란의 핵개발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북한에 대해 6자회담 테이블로 돌아오라고 공동 촉구했음.
-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는 이날 오프닝 행사에서 “북한과 이란은 전 세계 안보에 심각한 위협 요인이 되고 있다”며 “이번 회의는 국제사회가 북한과 이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특히 어려움을 맞은 상황에서 열린다”며 의미를 부여했음.
- G8 외무장관들은 “이란과 대화 가능성을 열어 놓으면서도 국제사회가 이란에 압력을 가하기 위해 적절하고도 강력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데 합의했다”고 말했음.
- 이는 미국·영국·프랑스·독일·캐나다 등 주로 서구 국가들로 구성된 G8 진영이 이란에 대한 4차 제재안 부과에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풀이됨. 실제로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30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란의 핵농축 프로그램에 대한 새 제재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예상했음.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몇 주 내에 유엔이 이란에 대해 새 제재안을 내놓기를 원한다고 이날 워싱턴에서 밝혔음.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거부권을 가진 중국은 이란에 대해 점차 인내심을 잃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외교적인 해결 방안을 선호하고 있음. 비상임 이사국인 터키와 브라질도 대이란 제재안에 대해 미온적이거나 반대하는 입장임.
- G8 외무장관들은 또 아프가니스탄 재건 작업이 확고하게 진척되고 있다면서 하미드 카르자이 대통령이 부패 척결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음. 이와 관련,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현재 적용 중인 아프간 전략이 효과가 있다면서도 정치적인 요소가 필요하다고 언급, 조심스러운 낙관론을 피력했음.

● 러, 유엔 대북 제재 1874호 이행 착수(3/30)

- 러시아가 30일 지난해 6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결의한 대(對)북한 제재 1874호 이행에 들어갔다고 리아 노보스티 통신 등이 크렘린궁 발표를 인용해 보도했음.
- 크렘린궁은 이날 자체 웹사이트를 통해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유엔 대북 결의안 1874호에 대한 대통령 명령서에 서명했다고 밝혔음. 지난해 5월 북한 핵실험 이후 러시아를 포함한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 결의안 1874호는 선박검색, 무기금수, 금융제재 등을 담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 등 여러 국가가 이 결의안을 이행하고 있음. 당시 전문가들은 1874호 결의로 북한이 수십억 달러 상당의 경제적 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했음.



- 제재 이행 명령서 서명이 이뤄짐에 따라 러시아 헌법의 영향을 받는 모든 정부 기관과 기업, 은행, 민간은 특별한 명령이 있을 때까지 제재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행해야 함.
- 북한 제 무기 수입 물론 러시아 영토를 통한 북한 무기 반입과 이동, 제 3국으로의 수출도 금지됨. 러시아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북한의 6자회담 복귀와 핵 포기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면서 북한을 압박하고 있음. 29일 열린 한·러 차관급 전략 대화에서도 선(先) 6자회담 복귀-후(後) 제재 해제라는 입장 재확인하면서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음. 한편, 북한은 자신들에 대한 유엔과 미국의 모든 제재가 풀려야만 6자회담에 나갈 수 있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음.

나. 미·북 관계

● 美 “北 비핵화조치 때까지 제재철회 안 해”(4/3)

- 미국은 2일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고 비핵화를 위한 긍정적 조치를 취할 때까지 대북제재가 철회되지 않을 것임을 확인했음. 필립 크롤리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은 대북제재가 철회될 경우에만 6자회담에 참석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는 질문에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음.
- 크롤리 차관보는 “(북한에 대해)제재들이 있다”면서 “북한이 6자회담에 전념하고 비핵화를 위한 긍정적 조치를 시작할 때까지 그런 제재들을 철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음. 그는 “북한이 세계와 다른 관계를 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그들도 알고 있다”면서 “그들이 단순히 (6자회담으로) 되돌아오는 것에 보상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음.
- 그는 “우선 그들은 (6자회담으로) 되돌아와야 한다”면서 “하지만 우리는 그들이 비핵화를 위한 긍정적 조치를 취할 때에나 보상을 할 것이며, 그 이전에는 보상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그는 ‘우리는 똑같은 말을 두 번 사지는 않을 것’이라는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의 언급을 이 사안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보여주는 가장 훌륭한 말 중의 하나로 소개했음. 이 밖에 그는 천안함 침몰 원인과 관련한 질문에 “여전히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음.

● “美, 비핵국 핵공격 포기.. 北,이란 예외”(4/2)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핵무기 비보유 국가들이 핵무기비확산조약(NPT)을 충실히 준수할 경우 결코 핵무기로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는 새로운 핵정책을 선언할 가능성이 있지만 여기에 북한과 이란은 예외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음.
- 영국 더 타임스 인터넷 판은 2일 조간만 예정된 오바마 대통령의 ‘핵정책 보고서’ (Nuclear Posture Review) 발표를 앞두고 미국이 어



면 상황에서도 먼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할지 주목된다고 전하고, 미국군축협회(ACA) 사무국장인 대릴 김볼의 말을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 즉, 오바마 대통령은 핵무기 비보유국들이 NPT를 성실하게 준수한다는 전제 아래 핵위협으로부터 이들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소위 ‘소극적 안전보장’(NSA, Negative Security Assurance)을 선언할 예정이라는 것임.

- 신문은 오바마 대통령이 국방부 등과 협의를 거쳤으며 오는 8일 프라하에서 예정된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1) 후속 협정 조인에 앞서 다음 주 초 이 같은 내용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해 4월 프라하에서 ‘핵무기 없는 세상’ 비전을 선포한 뒤 핵정책을 재검토해왔으며, 이 같은 내용은 ‘미국은 핵무기 비보유 국가를 핵무기로 공격할 수도 있다’는 조지 부시 행정부의 정책을 바꾸는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 오바마 대통령은 이와 함께 핵무기를 추가로 감축하거나 새로운 핵무기 시스템의 개발도 포기할 수 있다는 뜻을 전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신문은 이밖에 미국은 독일과 벨기에, 터키,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에 있는 전술 핵무기인 B61 열핵폭탄(수소폭탄) 약 200개의 철수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 “北화폐개혁은 구시대적 착오” <美전문가>(3/31)

- 북한 문제 전문가인 미국 아시아재단 한미정책연구센터의 스콧 스나이더 소장은 31일 “북한이 단행한 화폐개혁은 1960년대식 배급 체계를 회복할 수 있다는 구시대적 계산 착오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경제연구원과 한국경제 주최로 서울힐튼호텔에서 열린 ‘북한경제, 글로벌포럼 2010’ 주제발표에서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북한의 경우 국가가 충분한 공급물량을 확보할 능력이 없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 그는 이어 “이번 화폐개혁 실패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있는지, 얼마나 많은 현금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를 보여줬다는 데 정치적 의미가 있다”면서 “화폐개혁 실패는 앞으로 북한이 국제화 추세에 따라야 한다는 것을 보여줬으며, 많은 정책 전환이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주평(朱鋒) 중국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 교수도 “북한의 화폐개혁 실패는 명백하다”면서 “화폐개혁은 경제에 대한 당의 통제를 강화하고 개인의 재산권을 빼앗으려는 것이었는데 이는 경제 정책의 퇴행이자 인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비양심적 조치였다”고 비판했다.
- 주 교수는 또 “김정일 정권은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으로, 많은 북한 사람들이 당의 정당성에 의심을 품는다는 말이 있다”며 “예전에는 모든 잘못을 미국 탓으로 돌릴 수 있었지만 이제는 지도자에게 의심을 품기 시작해 새로운 불안감을 조장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 스타인버그 “北비핵화 다짐 없인 진전 불가”(3/30)

- 미국 국무부 내에서 대북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제임스 스타인버그 부장관은 29일 장기 교착상태인 6자회담 문제와 관련, “북한이 진정으로 비핵화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 한 (현 상황을) 진전시킬 수 없다”고 말했다.
- 스타인버그 부장관은 이날 워싱턴D.C.의 외신기자클럽 기자회견에서 “(북핵과 관련된) 전반적인 이슈에서 진전을 이뤄내려 한다면 6자회담으로의 복귀 밖에 없다는 것을 회담 당사국들은 모두 인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 스타인버그 부장관은 “만일 비핵화 프로세스에 대한 북한의 재다짐을 놓고 신뢰가 쌓인다면, 양자 및 다자 관계에서 좀 더 희망적인 길이 열릴 것”이라며 “북한이 이런 함수관계를 이해하고, (6자회담의) 과정으로 복귀하는 것이 자신들에게 이익이 된다는 것을 알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북한이 일을 진전시킬 준비가 돼 있는지, 또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할 것인지 등에 관해 청취를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를 분명히 밝혔다”면서 “북한의 긍정적인 응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 이어 그는 “우리는 북한으로부터 좋은 결과와 응답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언제, 그리고 과연 이런 노력이 결실을 볼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 스타인버그 부장관은 회견 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방중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 美정보당국, “北-테러단체 지원증거 없다” 판단(3/30)

- 미국은 지난 2008년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기에 앞서 이슬람 무장단체 헤즈볼라를 비롯한 테러단체와 북한간의 연계 의혹과 관련된 믿을만한 증거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사실은 미 국무부 법률고문실이 29일 공개한 ‘2008년 미국의 국제법 실행 요약’ 보고서에 포함된 2008년에 작성된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타당이유 메모’에서 나타났다.
- 조지 부시 당시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 방침에 맞춰 작성됐던 이 메모는 “현재 정보(당국) 평가는 해제 요건을 충족시킨다”고 밝혔다.
- 이 메모는 “가용한 모든 정보를 검토했지만 현 시점에서 북한이 국제테러를 지원하고 있다는 믿을만한 증거를 보지 못했다”면서 “정보당국의 평가를 검토한 결과 북한이 헤즈볼라, 타밀호랑이(스리랑카 반군세력)나 이란 혁명수비대에 직·간접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는 의혹을 지지하는 신빙성 있거나 일관된 보고가 없다”고 전했다.
- 한편 당시 메모는 1987년 대한항공기 폭파사건 개입으로 북한이 1988년 테러지원국에 지정됐지만, 1998년 이후 북한이 국제테러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이 메모는 또 북한을 테러지원국에



서 삭제해 줄 경우 국제사회가 싫어하는 일에서 벗어남으로써 북한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보여줄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음.

- 부시 당시 대통령은 2008년 6월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 방침을 발표한 뒤 같은 해 10월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했음. 하지만 북한이 지난해 제2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 등 도발적인 행동을 계속하자 미 의회를 중심으로 테러지원국 재지정 요구가 다시 거세졌음. 이에 대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달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북한이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되는데 필요한 법적인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이를 사실상 거부한 바 있음.

다. 중·북 관계

● “김정일 3일 저녁 평양서 中대사와 연회”<신화>(4/4)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3일 저녁 평양에서 류홍차이(劉洪才) 신임 주북한 중국대사의 취임을 축하하기 위한 연회에 참석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4일 오전 보도했음.
- 이날 북한의 조선중앙통신도 구체적인 장소를 언급하지 않은 채 관련 기사를 보도했으나 신화통신은 연회가 개최된 장소를 평양이라고 명시했음. 이로써 중국 방문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김 위원장이 적어도 3일 저녁까지는 평양에 머물렀다는 사실이 확인됐음.
- 통신은 김 위원장이 류 신임대사와 중국 대사관 외교관, 방문 중인 텐진(天津) 여자배구단을 위해 함께 연회를 베풀었다고 전했다. 통신은 김기남 북한 노동당 중앙위 비서가 “북·중 우호 관계는 양국 선대 혁명가들이 손수 맺어 키워온 것”이라면서 “양국 간 우호관계는 김정일 위원장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의 지도하에 새로운 단계로 부단히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류 대사도 “중국은 북한과 함께 후진타오 주석과 김정일 위원장의 지도 정신에 따라 양국 우호 협력관계를 부단히 강화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길 희망한다”고 말했음.
- 이날 연회에는 최태복 노동당 중앙위 비서,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 김양건 노동당 통전부장, 김영일 당 국제부장, 국방위원회 위원, 김정각 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 김원홍, 현철해, 박재경 인민군 대장 등이 참석했음. 연회 참석 직전 최태복, 김기남 비서와 류 대사는 중국 텐진 여자배구단과 북한의 4.25 여자배구단 간의 친선경기를 관람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 “단둥 도착한 北열차는 화물열차” (4/3)

- 3일 새벽 중국과 북한 국경을 통과, 북한 접경 지역인 단둥(丹東)에 도착한 북한 열차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탄 특별열차가 아니라 화물열차인 것으로 파악됐음.
- 3일 단둥과 선양의 소식통들은 “새벽 단둥에 도착한 열차가 검은색



이었던 점으로 미뤄 신의주와 화물열차인 것으로 보인다”며 “파란색인 여객열차와 구별된다”고 밝혔다.

- 신의주-단둥간 열차는 통상 단둥에 도착하면 하역 작업 등을 한 뒤 이튿날 북한으로 돌아가며 이 화물열차 역시 이날 오후 현재 단둥 역내에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음.
- 소식통들은 “흔하지는 않지만 새벽 시간에 신의주와 단둥을 오가는 화물열차가 운행된다”며 “모든 정황을 고려할 때 김 위원장의 방중 특별열차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 통상 김 위원장의 특별열차는 단둥 역에 도착한 뒤 중국 측 인사들의 영접을 받고 베이징으로 출발하는데 이날 새벽 열차가 단둥 역에 정차했을 당시 역 주변에 영접 인파가 없었으며 압록강 철교나 역 주변의 경계도 강화되지 않았다는 게 목격자들의 전언임.
- 선양(瀋陽) 한국총영사관 역시 “기차가 빠르게 (압록강 철교를) 지나가는 바람에 당시 여객열차인지, 화물열차인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면서도 “중국 측 동향이나 정황으로 보서는 김 위원장이 이 열차에 탑승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 단둥에서 이 열차를 녹화한 방송 매체들도 녹화된 영상을 통해 화물열차인 것으로 보고 있음. 북한의 조선중앙방송은 3일 김 위원장이 만수대예술단 공연을 관람했다고 보도했는데 통상 북한 매체들이 김 위원장 동정을 이튿날 보도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김 위원장이 여전히 북한에 머물고 있을 가능성이 커 보임.
- 김 위원장의 방중 임박설이 나도는 가운데 이날 새벽 3시50분(한국 시각)께 북한 열차가 단둥에 도착했으며 정부의 한 소식통은 이례적으로 새벽 시간대에 운행됐다는 점에서 이 열차가 김 위원장의 방중과 관련 있는 특별열차일 가능성을 제기했음.

● “주북 中대사 1일 평양서 리셉션”<신화>(4/3)

- 류홍차이(劉洪才) 주북한 중국대사가 지난 1일 평양에서 북한 고위층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 기념 리셉션을 개최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2일 보도했음.
- 이날 리셉션에는 양형섭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부위원장이 참석해 축하를 했으며 리용남 무역상, 안동춘 문화상 등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부위원장은 “북·중 우호 관계는 양국 선대 혁명가들이 손수 맺어 키워온 것”이라면서 “역사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반드시 한 단계 더 강화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에 앞서 류홍차이 대사는 지난달 31일 대안(大安)중기 공장 등 평양일대의 북한 기업 3곳을 둘러봤다고 신화통신이 별도의 기사를 통해 보도했음. 주북 중국대사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2000년 이후 4차례 방문 때마다 모두 수행해 왔기 때문에 김 위원장의 중국 방문은 아직 시작되지 않은 것으로 관측됨.
- 한편 베이징(北京)과 단둥(丹東)의 소식통들은 천정가오(陳政高)



랴오닝(遼寧)성장이 2일 오후 단둥으로 떠났고 이기범 주선양(瀋陽) 북한 총영사 등 총영사관 관계자들도 단둥에 도착한 것으로 안다고 말해 김 위원장의 방중이 임박했음을 시사했음.

● <중지방정부, 北 잇는 교량건설 '경쟁'>(4/2)

- 동해 진출과 북한 자원개발 확보에 적극적인 중국의 지방정부들이 북한을 잇는 교량 건설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음. 북한과 합작으로 압록강 상류인 입토와 문악 등 2개의 수력발전소를 건설키로 하고 지난달 31일 기공식을 한 중국 지안(集安)시는 현재 압록강 너머의 북한 만포시와 연결하는 교량 건설도 추진 중임.
- 지안시의 한 관계자는 2일 “2년 전 이미 조감도까지 마련됐다”며 “북한이 소극적이어서 진척은 없지만 교량 건설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계속 설득 중”이라고 말했음.
- 지안의 한 택시기사는 “다리가 건설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외곽 지역이었던 다리 건설 예정지 부근 집값이 크게 올랐다”며 “12만 위안에도 쳐다보지 않았던 이 일대 평집(단층집)이 요즘엔 15만 위안까지 올랐다”고 전했다. 지안시가 다리를 건설하려는 곳은 압록강철교 상류로, 만포시내와 바로 연결되는 지점임.
- 동북 내륙의 깊숙한 곳에 있으며 도심 인구 8만 명에 불과한 지리적 한계를 북한과의 교류 확대와 자원개발을 통해 극복하려는 의도로 보임.
- 현재 지안-만포를 잇는 압록강 철교와 차량 통행용 다리가 있지만 너무 낡아서 화물열차가 왕복 하루 한 번 운행하고 육로 통행도 극히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음.
- 반면 신의주 등 다른 변경지역과는 달리 압록강 너머로 도심이 훨씬 보일 만큼 지안과 근접한 만포시는 개방에 따른 후유증을 우려, 다리 건설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왔음.
- 그러나 이번 압록강 수력발전소 기공식 참석차 지안을 방문한 김만수 전력공업성 부상 등 북한 대표단이 2일까지 3일째 지안에 머물며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져 압록강 다리 건설과 관련, 진전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음.
- 북·중은 이에 앞서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의 지난해 10월 방북 당시 단둥-신의주를 잇는 신압록강대교를 건설키로 합의, 오는 10월 착공키로 했음. 지난달에는 7월 개통을 목표로 북방지역인 훈춘(琿春)-라진항 통로인 원정리 노후 다리 보수공사에도 시작됐음.
- 중국이 라진항에 이어 청진항도 동해 진출의 거점으로 확보하려 노력하는 가운데 연변(延邊)조선족자치주 투먼(圖們)시는 지난해 노후한 투먼-청진항 구간 철도를 보수하기로 북한과 합의했음. 투먼시는 170km에 이르는 이 철도 보수 공사를 올 상반기 착공할 것으로 알려졌다.



● <김정일 방중임박> ② 6자회담 재개 기대감(4/1)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방중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난 2008년 12월 이후 장기 휴업상태에 빠진 북핵 6자회담이 조만간 재개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음.
- 무엇보다도 북한 체제의 특성상 김정일 위원장만이 최종결정을 내릴 수 있고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 수뇌부를 만난 김 위원장이 중국의 희망을 저버릴 가능성이 적기 때문임.
- 북핵 현안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1일 “과거에도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을 계기로 (6자회담에 대한) 북한의 입장이 바뀐 적이 있다”면서 “우리 정부로서도 김 위원장 방중이 이뤄진다면 북한이 6자회담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실제로 ‘BDA 제재’를 통해 북한을 향한 국제사회의 금융제재가 본격화되던 2006년 1월 방중한 김 위원장은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에서 미국의 금융제재를 6자회담의 난관으로 지적하며 6자회담 진전을 위해 중국과 함께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미국 역시 기대감을 숨기지 않고 있음. 마크 토너 국무부 부대변인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각) 정례브리핑에서 “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할 경우 중국 정부가 북한 측에 6자회담 복귀를 촉구하고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우려를 얘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정부 고위당국자도 “김 위원장이 방중한다고 해서 6자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겠지만 6자회담에 나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화폐개혁 실패로 인한 심각한 경제난 타개를 위해 중국의 경제지원이 절실한 북한의 처지도 이런 관측에 무게를 실음.
- 다른 소식통은 “중국도 6자회담이 15개월 넘게 열리지 않고 있다는 점을 무거운 짐으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6자회담 복귀를 계속 거부한다면 중국으로서도 달갑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다른 시각도 있음. 전체적으로 비관적인 전망은 아니지만 김 위원장이 중국 지도부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확약하지 않고 한반도에 대한 비핵화 의지만 밝힐 가능성도 있다는 것임. 이 경우 실제 6자회담이 재개되기까지 또다시 상당한 물밑 조율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 한 소식통은 “김 위원장이 중국에서 6자회담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더라도 실제 6자회담이 언제 열릴지는 아직 미지수”라며 “회담이 열리더라도 북한이 비핵화의 전제조건으로 대북제재 해제 등을 주장하며 회담을 지연시킬 수도 있다”고 말했다.
- 한미 양국은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을 계기로 북한이 6자회담에 조기 복귀할 가능성과 그렇지 않을 가능성 등을 다각도로 전망하면서 향후 대응 시나리오를 집중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1일 오전 전화통화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양국 간 공조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한 것으로 전



해졌음.

● <김정일 방중임박> ① 김정은 동행하나(4/1)

-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이 임박하면서 후계자로 내정된 3남 김정은의 동행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음. 과거 김 위원장의 4차례 방중 전력을 보면 북한 당·정·군의 내로라하는 실세들이 어김없이 방중 수행에 나섰다 때문임.
- 특히 이번 방중은 김 위원장의 후계구도 이양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관측이 높아 김정은의 대동 가능성에 더욱 시선이 쏠리고 있음. 일단 대북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김정은 동행 가능성을 놓고 관측이 엇갈리고 있음.
- 우선 김 위원장으로서 이번 방중을 차기 후계자를 공식 데뷔하는 무대로 삼는다는 차원에서 김정은을 대동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옴. 최근 건강이 악화된 김 위원장으로서 이번 방중을 계기로 차기 후계자로서의 권력이양을 서두를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임.
- 유호열 고려대 교수는 “공개되지는 않겠지만 김정은을 대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며 “중국 지도부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차기 후계자를 선보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음. 유 교수는 이어 “중국으로부터 지지를 획득하는 동시에 김정은으로서 대외관계와 외교를 연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음.
- 그러나 김정은이 대동할 경우 이번 방중의 의미가 희석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라 동행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만만치 않음. 특히 최근 불안한 북한 내부 정세를 고려할 때 최고 실권자와 후계자가 동시에 ‘안방’을 비우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음. 양무진 북한대학원 교수는 “대동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며 “김정은을 대동하면 북한과 중국 모두 부담을 가질 수 있다”며 “방중 이슈가 김정은 위주로 흐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음. 한편 김정일 위원장의 이번 방중에는 7~8명의 고위인사들이 수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 중단동시 “김정일 방중 통지없었다”(4/1)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방중이 임박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지만 중국 방문의 길목인 중국 단둥시 측은 1일 “현재까지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과 관련한 아무런 통지를 중앙 정부로부터 받지 못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음.
- 중국 단둥시정부 외사관공실의 자오스(焦石) 부주임은 이날 연합뉴스와 만나 공산당 대외연락부와 외교부 등 당 및 중앙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통지 또는 언질을 전혀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음. 그는 또한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이 임박했다는 한국 언론들의 보도를 주위 사람들의 전언을 통해 접했다”면서 “다른 국가의 지도자가 단둥을 방문한다면 우리가 모르고 진행될 리는



없다”고 말했다.

- 그는 “김정일 위원장이 2006년 방중했을 때나 2008년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단둥을 방문했을 때 모두 안전 확보 및 의전 차원에서 외사관공실이 관여했다”고 말했다.
- 자오 부주임은 “우리가 아직까지 공식 통보를 못 받은 것으로 판단 하건대 오늘 저녁 방중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면서 “만일 오늘 그렇게 큰일이 있다면 이런 연합뉴스와의 인터뷰도 불가능하지 않았겠느냐”고 반문했음. 김정일 위원장이 단둥에 도착하면 단둥시 서기 또는 시장과 함께 단둥시정부 외사관공실 주임도 영접을 나가는 게 관례인 것으로 알려져 있음.

● “김정일, 이르면 내일 중국 국경 넘을 가능성”(4/1)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이르면 1일 또는 2일 중국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1일 “이르면 오늘 밤중에라도 김 위원장이 평양을 출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현재 정밀하게 워치(Watch)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 또 다른 소식통은 “오늘부터는 언제라도 김 위원장이 방중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이르면 내일 중 중국으로 월경(越境)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 김 위원장은 중국방문 시 전용 특별열차 편을 이용해 평양을 출발, 신의주-단둥 루트를 통해 국경을 넘은 뒤 선양(瀋陽)을 거쳐 베이징(北京)으로 향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한 대북소식통은 “산업철도 등의 우회로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 정상적인 이동경로를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 김 위원장의 방중기간은 오는 9일 북한 최고인민회의의 일정과 건강상태 등을 고려할 때 3~4일 정도의 단기간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한 소식통은 “북한과 중국이 충분히 사전협의를 해온데다 김 위원장이 장거리 여행을 소화해내기 쉽지 않은 건강상태인 점 등을 감안할 때 방중기간이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이번 방중에 차기 후계자로 내정된 3남 김정은의 동행 여부가 큰 관심을 끌고 있음.
- 외교가 일각에서는 김 위원장의 동선이 지나치게 노출돼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김 위원장의 방중계획이 취소 또는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으나 중국 측이 사전에 확실한 신변안전을 보장했다는 분석도 나돌고 있어 주목됨.

● 中군사위 부주석-北 군사대표단 회담(3/31)

- 중국 중앙군사위원회의 쉬차이허우(徐才厚) 부주석은 30일 베이징(北京) 8.1청사에서 안영기 소장(한국군의 준장)을 단장으로 한 북한 군사대표단과 회담했다고 신화통신이 31일 보도했음. 쉬 부주석은 이 자리에서 중국 경제와 인민해방군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어떤



정세변화가 있더라도 양국 군사관계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중·북 양국은 군사관계의 중요성과 전략적 의미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서로 이해와 신뢰를 한층 증진시키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데 공동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쉬 부주석은 아울러 "중국과 북한의 전통적 우호관계는 마오쩌둥(毛澤東) 전 중국 국가주석과 저우언라이(周恩來) 전 중국 총리, 그리고 고(故) 김일성 주석 때부터 배양돼 온 것으로 양국의 진귀한 재산"이라며 "중국 공산당과 정부, 인민해방군은 이를 매우 중시하며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간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 이에 안영기 소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중국의 현대화와 인민해방군 건설의 경험을 배우겠다"고 화답했다. 그는 이어 "조(북)·중간 전통적 우호관계를 부단하게 공고히 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조선 노동당과 정부의 견고한 입장"이라며 "양국 군 관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외사부문의 제휴를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 이 통신은 북·중 군사대표단간 회담에 북한의 최진수 주중 대사와 중국의 마샤오펜(馬曉天) 인민해방군 부총참모장, 첸리화(錢利華) 국방부 외사관공실 주임이 자리를 함께 했다고 공개했다. 북한 군사대표단은 30일 베이징 공항에 도착했으며 이 장면이 언론에 포착되기도 했다.

● 北김정일 방중 징후 곳곳 포착(3/31)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 징후가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단둥의 한 소식통은 31일 "지난 28일부터 중국 방문의 관문인 단둥에서 북한의 기관원으로 보이는 인원들이 역 주변과 시설에 대한 보안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다"고 전했다. 또 이날 단둥에서는 김 위원장이 방중 시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조(북)중 우의교' 철로 위를 중국과 북한 측 관계자 10여명이 점검하는 모습도 확인됐다.
- 특히 평소와는 달리 중국 군인 1명이 철교 위를 기어 올라가 윗부분까지 점검하는 장면도 목격돼 김 위원장의 방중이 임박했다는 관측을 부추기기도 했다.
- 이와 함께 단둥 내 일부 중국인 대북 무역상들 사이에서는 지난주부터 주요 물자를 수송하는 화물열차 운행이 중단됐고 북한 측 인사들로부터 당분간 전화통화가 어렵다는 반응이 있었다는 전언도 나오고 있다. 한 소식통은 "지난 24일째부터 신의주에서 단둥으로 오는 주요 물자 수송이 중단됐고 지난주까지는 가능했던 문자메시지도 29일부터는 아예 들어오지도 않는다"면서 통신보안이 크게 강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 단둥 일부 지역에서 계속되는 휴대전화 불통사태도 김 위원장의 방



중과 연관이 있다는 얘기도 나옴. 단둥의 한 대북 무역상은 “133 전화로 연락하던 신의주의 파트너와 오늘 온종일 통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했고 133 휴대전화 통신사인 중국덴신(電信) 측은 “북한의 전파 방해가 심하기 때문”이라며 “휴대전화가 신호는 잡히는데 상태는 좋지 않다”고 밝혔음. 단둥의 다른 소식통은 “최근 북·중 국경지역에서 휴대전화를 통해 북한 내부 정보가 빈번히 유출되자 북한 보안당국이 이를 차단하기 위해 취한 조치일 수도 있지만 비밀 방중과 관련해 보안을 유지하려는 목적일 수도 있다”고 말했음.

- 이 소식통은 “2004년 용천역 폭발사고를 경험한 북한으로선 김 위원장 방중 시 이동경로에 대한 보안과 신변안전 조치에 신경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으리라는 추정도 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음. 그러나 이날 저녁 현재까지 단둥역과 시정부 청사 등 주요 시설도 표면적으로는 평소와 다름없이 평온한 모습이 이어졌음.
- 베이징에서도 징후가 포착됐음. 베이징역 주변에서 음식점을 하는 한 소식통은 “30일 오전 평양발로 베이징에 도착한 국제열차에 건장한 체격에 세련된 복장을 한 북한주민 20여 명이 하차, 북한 대사관으로 향하는 모습이 목격됐다”고 말했음.
- 이런 가운데 연변(延邊)을 비롯한 두만강 일대도 31일부터 경비 인력이 대폭 보강되고 있으며 북한 호적을 갖고 중국에서 거주하는 주민 사이에 김 위원장의 방중설이 임박했다는 설이 파다하다는 게 현지 주민들의 전언임.
- 아울러 북한 만포와 접경인 중국의 지안(集安), 그리고 환런(桓仁) 등의 압록강 상류지역에서도 단둥과 마찬가지로 133 휴대전화가 잘 터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음.
-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이 경호상의 이유로 단둥이 아닌 두만강 또는 지안, 환런 등의 제3의 장소를 이용해 방중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옴. 일각에서는 이런 징후로 볼 때 김 위원장이 3~4일 내에 방중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음.
- 베이징 외교가에선 김 위원장이 방중한다면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과 원자바오(溫家寶)총리, 시진핑(習近平) 국가부주석의 일정이 없고 4월 9일에 북한에서 최고인민회의가 개막된다는 점에서 다음 달 초순이 적기로 보고 있음. 외교가 일각에서는 이미 북한이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 준비를 사실상 마쳤고 출발만 남은 것 같다는 전언도 나오고 있음.

● “中, 北에 대규모 원조 안할 것” <中전문가>(3/31)

- 중국은 북한과 더 이상 예전 같은 의미의 ‘혈맹’이 아니며 따라서 북한에 대규모 경제 지원을 하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중국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가 밝혔음.
- 주평 교수는 “중국에는 북한을 (대규모로) 도와줄 현금과 역량이 있지만 극단적으로 북한을 돕는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 “중국이 북한



을 돕는다면 아사자 속출을 막는 최소한의 인도적 수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주 교수는 이어 “북한은 굉장히 이기적이기 때문에 중국도 우리 국익을 생각해야 한다”며 “북한에 큰 원조를 제공해도 우리가 혜택을 얻을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현재 서울, 워싱턴, 도쿄와 협력해 북한의 진로를 바꿔보고자 노력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 주 교수는 또 “북한이 통제 가능하면서도 점진적으로 변화하기를 중국은 희망하며 갑작스런 붕괴나 큰 변화를 원하지 않지만 내 견해로는 큰 변화, 예컨대 붕괴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대비돼 있다”면서 “경제적으로 북한은 이미 붕괴했다고 말할 수 있고, 사회·정치적으로도 아슬아슬한 상황이어서 북한은 살아남기 위해 애쓰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 그는 작년 왕자루이(王家瑞)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의 방북을 계기로 중국 주도 하에 대규모 투자가 추진되고 있다는 설에 대해서도 “너무 일찍 발표된 것으로 진실성을 더 조사해봐야 한다”면서 “(투자 가능액도) 미화로 한 2천만 달러 정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그는 중국이 라진항 1호 부두 사용권을 획득한 것과 관련, “중국은 라진항을 관리 사용하기 위한 수준에서만 투자하고 그것을 넘어서는 투자는 하지 않을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그는 북한의 화폐개혁에 대해 “실패는 명백하다”고 단언한 뒤 “화폐개혁은 경제에 대한 당의 통제를 강화하고 개인의 재산권을 빼앗으려는 것이었는데 이는 경제 정책의 퇴행이자 인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비양심적 조치였다”고 비판했다.
- 한편 미국 아시아재단 한미정책연구센터의 스콧 스나이더 소장은 이날 주제발표에서 “북한이 단행한 화폐개혁은 1960년대식 배급 체계를 회복할 수 있다는 구시대적 계산 착오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화폐개혁 실패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있는지, 얼마나 많은 현금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를 보여줬는데 정치적 의미가 있다”면서 “화폐개혁 실패는 앞으로 북한이 국제화 추세에 따라야 한다는 것을 보여줬으며, 많은 정책 전환이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北, 1~2월 중서 2억3천만달러 수입, 작년비 30%↑(3/30)

- 북한이 올해 1~2월 중국에서 물자를 수입한 액수가 작년 동기보다 30% 많은 미화 2억3천만 달러에 달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30일 중국 상무부 자료를 인용해 보도했다. 대북 전문가들은 작년 11월말 화폐개혁 이후 북한의 식량난과 재화부족이 심해져 올해 들어 중국으로부터 수입이 급증한 것으로 보고 있음.
- 월별로 1월 수입액은 1억1천200만 달러로 작년 동월 대비 31%, 2월 수입액은 1억1천700만 달러로 28% 증가했다고 VOA는 전했다. 북한의 수입 급증으로 1~2월 양국간 교역액도 3억100만 달러로 작년



동기(2억6천700만달러)보다 13% 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양국 간 1~2월 교역액이 가장 많았던 2008년의 2억7천600만보다 2천500만 달러 늘어난 것임.

- 반면 북한의 대중국 수출은 1월에 3천600만 달러로 16%, 2월에 3천500만 달러로 26% 줄었고 이에 따라 같은 기간 북한의 대중국 무역적자가 1억5천800만 달러에 달했음. 중국 상무부는 그러나 북·중간 교역 물품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는 않았다고 VOA는 말했음.

● 北김정일, 류홍차이 신임 중국대사 만나(3/30)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9일 류홍차이(劉洪才) 신임 중국대사를 만나 환담을 나눴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중앙통신은 “김정일 동지께서 새로 부임해온 류홍재 특명전권대사를 환영하고 그와 따뜻한 담화를 했다”며 “신임특명전권대사를 위하여 만찬을 마련했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환담 및 만찬 장소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음.
- 만찬에는 북한 측에서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 김영일 당 국제부장 등이 배석했음. 중앙통신은 “만찬회는 화기에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고 전했다. 환담 및 만찬 석상에서 나온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소개하지 않았음.

● 阿방문 北김영남.. 中과 접촉없어(3/29)

- 북한의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아프리카 순방길에 베이징을 들러 하루를 머물렀으나 중국 측과 접촉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음. 베이징의 한 소식통은 29일 “김 상임위원장이 27일 밤 베이징 소재 북한 대사관에서 숙박했다”고 전했다.
- 이 소식통은 “김 상임위원장이 중국에 머문 시간이 짧아 중국 측과 그 어떤 만남도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조선중앙통신은 27일 김 상임위원장이 가봉, 감비아, 세네갈 등 아프리카 3개국을 방문하기 위해 특별비행기로 평양을 출발했으며 최창식 보건장, 김형준 외무성 부상, 리명산 무역성 부상 등이 수행했다고 보도했음.
- 김 상임위원장은 아프리카 방문을 마치고 다음달 7일 베이징을 경유해 귀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권력서열 2위인 김 상임위원장의 아프리카 방문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 임박설이 나돌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됨.

● “최병관 주중 北대사 내달 중순 부임”(3/29)

- 북한의 최병관 신임 주중 대사가 다음 달 중순께 부임할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징의 한 소식통은 29일 “현 최진수 대사가 아직 베이징에 체류 중이며 4월 중순 새 대사가 올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신임 최 대사는 업무 인수인계 차원에서 최진수 대사와 2주가량 합동



근무할 것으로 전해졌음.

- 신입 최 대사는 북한 외무성의 부부장(차관) 급으로 영사국장을 두 차례 역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이달 초 관리 생활의 대부분을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에서 보낸 북한통인 류홍차이(劉洪才.54) 대외연락부 부부장을 북한 주재 대사로 보냈음.

● “中, 對北 식량원조 기업 선정방식 변경”(3/29)

- 중국이 지금까지 수의계약으로 정하던 대북 식량원조 창구 기업을 지난해부터 입찰 방식으로 모집하기 시작했다고 도쿄신문이 29일 보도했음. 계약 투명성을 중시하게 된 중국의 변화가 대북 관계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됨.
- 보도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그동안 동북 지방에 거점을 둔 특정 기업을 창구로 지정해 일정 금액을 주면 이 기업이 옥수수나 쌀을 사들여 북한에 넘기는 방식으로 무상 원조했음. 그동안 관행과 달리, 지난해부터 경쟁 입찰 방식으로 바꿨다는 것임.
- 이 밖에도 도쿄신문은 그동안 창구 기업이 자금 일부를 식량으로 바꾸지 않고 현금으로 북한에 제공했는데 경쟁 입찰 방식으로 바뀌면서 이것이 불가능해졌다고 덧붙였다.
- 북한의 귀중한 외화 획득 수단이던 현금을 더 이상 제공하지 않기로 한 것은 중국이 지난해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일정한 압력을 가하는 의미도 있다고 풀이했음.
-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일본의 북한경제 전문가는 “중국이 기업선정 방식을 경쟁입찰로 바꾸는 건 투명성 강화나 비용 절약 차원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그로 인해 현금을 제공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은 오해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권태진 글로벌협력연구본부장도 “식량을 무상원조할 때 운송 비용을 현금으로 주는 게 국제관례”라며 “중국이 지금까지 북한에 줬다는 현금은 이 운송비를 가리키는 것일 수 있다. 이는 중국이 기업 선정 방식을 입찰로 바꿨다고 해서 갑자기 주지 않을 수 있는 돈이 아니다”라고 말했음.

라. 일·북 관계

● 日, 대북제재 1년 연장키로(3/31)

- 일본 정부가 북한 선박의 입항 금지 등 대북 제재를 6번째 연장하기로 했다고 교도통신이 31일 보도했음. 한때 정부 여당안에서 제재기간을 6개월로 줄이자는 의견이 부상했지만 지금까지처럼 1년간 연장하기로 했음.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관계 부처 부대신(차관)급 정책회의를 열고 내달 13일로 기한이 다가온 대북 제재 기간을 1년간 연장하기로 했음. 이는 이르면 내달 2일 내각회의를 거쳐 공표될 예정임.



- 6개월이 아니라 1년간 연장한 이유는 북한이 2008년 8월 합의한 납치 문제 재조사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고 핵개발 문제를 둘러싼 6자 회담 복귀에도 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일본은 자민당 정권 시절인 2006년 10월 북한의 핵실험 직후 독자적인 대북 경제제재 조치에 착수했고 이후 4차례에 걸쳐 6개월씩 연장한 뒤 5번째인 지난해 4월에는 제재를 강화한다며 1년간 연장했음. 지난해 5월 북한의 2차 핵실험 직후에는 대북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추가 제재에 들어갔음.

마. 기타

● “北, 함흥도 외국인 관광객에 개방” <中여행사>(4/3)

- 북한 관광을 전문으로 하는 중국 고려여행사는 3일 홈페이지에서 “지난 1월 북한이 미국인에 대한 관광 제한 조치를 풀면서 함흥도 모든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개방했다”고 밝히면서 오는 8월7일 첫 함흥 관광에 나설 관광객의 모집에 나섰다.
- 이 회사는 “북한에서 3번째로 큰 도시인 함흥은 한번도 서방 관광객들이 방문한 적이 없다”며 함흥시내는 물론 명승지인 마전유원지, 사찰 등을 둘러보고 북한이 지난해 7월 준공한 마전호텔에서도 1박 할 수 있다고 소개했음. 고려여행사 측은 이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에 “8월 관광단은 영국, 독일, 네덜란드, 이탈리아, 미국 등 서방 각국에서 온 관광단 20여명으로 꾸려질 것”이라고 밝혔음.
- 관광산업이 중요한 외화벌이 수단 중 하나인 북한은 지난해 함경북도 칠보산과 황해남도 해주, 평양 일부 지역 등을 새로 개방했으며 라진·선봉 지역도 올해 관광지로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음. 고려여행사는 홈페이지에서 “라선 관광은 오는 7월로 잡혀 있다”며 “라선은 중국과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면서 미스터리한 자유무역지대”라고 덧붙였다.

● 러 “한반도 핵문제 정치적 해결해야”(4/2)

- 러시아 정부는 한반도 핵 문제는 6자회담 틀 내에서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드레이 네스테렌코 외무부 대변인은 1일 (현지시간) 정례 언론 브리핑에서 “러시아는 여전히 6자회담 재개를 바라고 있으며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 러시아, 일본, 중국, 한국, 북한이 참여하는 6자회담에서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2일 러시아 언론매체들이 보도했음.
- 네스테렌코 대변인은 또 지난달 30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의 유엔 대북 결의안 1874호 명령서 서명에 대해 “전적으로 러시아에 법에 따른 내부 절차였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제재 이행 절차가 지연된 이유와 관련해 “우리는 이행 준비 과정에 관련 부처의 전문적인 의견을 들었고 그 동의를 얻는데 몇 개월의 시간이 걸렸



다”고 말했다.

- 대북 결의안 1874호는 지난해 5월 북한 핵실험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채택됐으며 선박검색, 무기금수, 금융제재 등을 담고 있음. 네스테렌코 대변인은 “러시아는 제재안에 강하게 동의하고 있지만, 이 제재는 영원히 지속하는 것이 아니라 재검토될 수 있고, 한반도 비핵화 실현 가능성 여부에 따라 폐지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 그는 앞서 지난 2월 모스크바에서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위원회 산하 ‘전문가 그룹’ 회의 이후 “북한 핵 프로그램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제거하는 것이어야 하며 제재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철회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음.
- 또 네스테렌코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달 26일 발생한 천안함 침몰사고와 관련 우리 정부에 위로를 표명하면서 “러시아는 대한민국이 전문적이고 공명정대한 조사를 통해 이번 참사에 관한 진상을 밝혀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이와 함께 그는 “일본 정부가 승인한 교과서에 남쿠릴열도(일본명 북방영토) 문제와 관련한 해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면서 일본의 계속된 영유권 주장은 양국관계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고 경고했음. 러시아와 일본은 남쿠릴 4개 섬을 놓고 영유권 분쟁하고 있음. 지난해 7월 일본 의회가 이 지역을 일본 고유의 영토로 규정한 북방영토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갈등이 더욱 깊어지고 있음.

● “황장엽 씨, 미국 도착.. 北상황 의견교환”(3/31)

- 미국 방문길에 오른 황장엽(87) 전 북한노동당 비서가 30일 오후 워싱턴 D.C.에 도착했음. 황 전 비서는 방미 기간에 미 의회, 학계, 민간단체 및 행정부 전·현직 인사들과 공식·비공식 회동을 갖고 최근 북한 상황 및 향후 전망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방문은 황씨의 두 번째 미국 방문으로, 워싱턴의 한 싱크탱크 초청으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음. 황씨는 지난 2003년 처음 미국을 방문했음.
- 앞서 정부의 정통한 소식통은 “오늘(30일) 황 전비서가 미국행 항공편에 탑승한 것으로 안다”며 “미국에서의 일정을 마친 뒤 귀국길에 일본도 방문할 계획인 것으로 들었다”고 전했다.
- 아사히신문은 황 전 비서가 4월초 일본을 방문한다고 전한 바 있음. 정부는 과거 안전상 이유와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한 고려에 따라 제약이 가해졌던 황씨의 해외 활동 자유를 보장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음.
- 1997년 망명한 황씨는 김대중 정부 시절 몇 차례 미국 방문을 시도했지만 여권을 발급받지 못해 뜻을 이루지 못했음. 참여정부가 출범한 해인 2003년 10월 우여곡절 끝에 단수여권을 발급받아 관광비자로 미국을 방문했지만 2006년 재차 방미를 시도했을 때는 여권을 받



급받지 못했음.

● EU, 北고려항공 운항제한 완화(3/30)

- 유럽연합(EU)이 북한 고려항공 여객기에 대한 역내 취항 금지조치를 완화했음. EU 집행위원회는 30일 발표된 역내 취항규제 항공사 명단(13차 개정판)에서 고려항공을 ‘부칙(ANNEX) B’ 등급으로 조정했음.
- 고려항공은 지난 2006년 3월 EU 집행위가 역내 취항규제 항공사 리스트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래 줄곧 전면 취항금지에 해당하는 ‘부칙 A’ 등급으로 분류돼 왔으나 4년 만에 처음으로 제한적 취항허가 등급인 B 등급으로 조정된 것임.
- 집행위는 “국제 항공 안전기준과 적정한 관리·감독에 부합하는 2대의 항공기에 한해 고려항공의 역내 취항을 허가하기로 했다”라며 “이 2대의 항공기를 제외한 나머지 고려항공 소속 항공기의 역내 취항은 계속 제한된다”라고 설명했다.
- 이에 앞서 이달 중순 열린 집행위 산하 항공안전위원회(ASC)는 고려항공을 부칙 A 등급에서 B 등급으로 조정할 것을 권고했으며 집행위가 이를 수용, 등급 조정을 확정했음. 당시 ASC 회의에는 고려항공 관계자가 직접 참석, 그동안 안전도 개선을 위해 취한 조처 등을 위원들에게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음. EU 집행위는 매년 3차례 취항금지 항공사 명단을 수정, 발표함.

● 印프라모드 미탈 글로벌스틸홀딩스 회장 방북(3/29)

- 프라모드 미탈 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인도 글로벌스틸홀딩스 대표단이 29일 방북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전했다. 그러나 방북 일정과 목적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음.
- 북한이 최근 외국자본 유치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프라모드 회장의 방북은 풍부한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는 철광석 등의 판매선 확보를 위한 것으로 보임.
- 또 프라모드 회장은 불가리아 제철소 크레미코브치를 운영하기도 했다는 점에서 북한이 제철공장의 경영권 등을 인도의 대표적인 철강 회사에 넘기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옴.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국방부 “美 NPR에 확장억제 공약 재확인”(4/2)

- 미국 정부가 조만간 의회에 제출할 핵태세검토보고서(NPR)에 한국에 대한 ‘핵 확장억제 및 안보공약’을 재확인했다고 국방부가 2일 밝



혔음.

- 장관일 국방부 정책실장과 장호진 외교부 북미국장 등 우리 대표단은 짐 밀러 미국 국방부 정책수석부차관과 로버트 아인혼 국무장관 특별보좌관 등과 화상회의에서 NPR를 협의한 뒤 미국 정부의 이런 입장을 확인했음.
- 국방부는 “이 협의는 전날 양국 대통령 간 통화 시 논의됐던 NPR 관련 후속조치로서 미측은 우리에게 대한 확장억제 제공을 포함한 공고한 안보공약에 변함이 없음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캠벨 미국무차관보 방한..북한 동향 협의(4/2)

-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동아태차관보가 2일 한국을 방문했음. 인도 방문을 마치고 이날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캠벨 차관보는 오후 김성환 청와대 외교안보수석과 신각수 외교통상부 제1차관을 예방, 한미동맹 현안과 북핵을 비롯한 북한 문제 등 전반적인 양국 현안을 논의함.
- 이어 북핵 6자회담 우리측 수석대표인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만나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방중 동향 및 향후 6자회담 재개와 북핵 대응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함.
- 외교부 관계자는 “캠벨 차관보는 인도에서 귀국하는 길에 ‘필드트립’(Field Trip) 차원에서 한국을 방문한 것”이라며 “외교안보라인 인사들과 만나 양국 현안 전반을 점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오바마, 한국 핵확장억지력 제공 재확인(4/1)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미국이 핵무기 감축을 추진하더라도 한국에 확장억지력을 제공하는 데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오바마 미 대통령은 이날 오전 7시 10분부터 20분간 이뤄진 이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조만간 NPR(Nuclear Posture Review: 핵태세 검토보고서)을 하원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이번 NPR 채택으로 인해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지력 제공이나 안보 공약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핵확산과 핵테러리즘 방지에 기여하는 의지가 담겼다고 들었다”면서 “동맹국들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고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지지 의사를 밝혔다.
- 이어 “최근 미국과 러시아의 신전략무기 감축협정 합의도 의미가 있고 핵 안보정상회의 또한 핵물질 이전과 핵 테러리즘 방지를 위한 상징적 의미가 크다”며 “세계 모든 정상들이 국제공조를 통해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평가했음.
- 오바마 대통령은 또 “천안함 사고 소식을 들었다. 진심으로 위로드리고 싶다”며 “이 대통령과 한국정부가 실종자를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데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 이 대통령은 “미국이 구축함과 구조대를 보내줘 고맙다. 나도 지난 달 30일 백령도에서 미 구조대원을 만나 감사의 뜻을 전했다”고 답했고, 오바마 미 대통령은 “어려울 때 우리 해군함이 한국함과 함께 작업을 해나가는 것을 뜻 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 이 대통령은 천안함 사고 원인 조사와 관련, “아직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고도의 기술이 필요해 확실한 결론을 내기까지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으며 이에 대해 오바마 미 대통령은 “(원인 분석 과정에서) 필요할 때 꼭 도움이 되고 싶다. 언제든지 준비가 돼 있다. 말씀해달라”며 전문가 지원을 비롯한 적극적인 협력의사를 표명했음.
- 이 대통령은 “오바마 미 대통령이 힘든 여건 속에서 의료보험 개혁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적지 않은 성과다. 미국민들에게 큰 혜택을 가져다줄 것으로 확신한다”고 축하했고, 오바마 미 대통령은 “이 대통령도 어려운 상황에서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다. 좋은 성과를 많이 거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음. 이날 두 정상의 전화통화는 미국의 요청으로 이뤄졌으며 두 정상은 지금까지 3차례 공식 전화통화를 통해 각종 현안을 논의하고 우의를 과시한 바 있음.

● 오바마, 천안함 사고조사 적극협력 의사표명(4/1)

- 이명박 대통령은 1일 오전 청와대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갖고 천안함 침몰사고 조사 및 이달 중순 핵안보정상회의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음.
- 이날 오전 7시 10분부터 20분간 이뤄진 전화통화에서 오바마 미 대통령은 “천안함 사고 소식을 들었다. 진심으로 위로드리고 싶다”며 “이 대통령과 한국정부가 실종자를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데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고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미국이 구축함과 구조대를 보내줘 고맙다. 나도 지난달 30일 백령도에서 미국 구조대원을 만나 감사의 뜻을 전했다”고 답했고, 오바마 미 대통령은 “어려울 때 우리 해군함이 한국함과 함께 작업을 해나가는 것을 뜻 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 이 대통령은 천안함 사고 원인 조사와 관련, “아직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고도의 기술이 필요해 확실한 결론을 내기까지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고, 오바마 미 대통령은 “(원인 분석 과정에서) 필요할 때 꼭 도움이 되고 싶다. 언제든지 준비가 돼 있다. 말씀해달라”며 전문가 지원을 비롯한 적극적인 협력의사를 표명했음.
- 오바마 미 대통령은 이어 “실종자 가족들의 상황에 안타깝게 생각하고 수색작업을 하다 숨진 고 한주호 준위 유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며 “부상한 승조원들도 하루속히 회복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 오바마 미 대통령은 또 “조만간 (미 핵전력 운용 방향을 제시하는) 핵태세 검토보고서를 하월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이번 NPR(핵태세



검토보고서) 채택으로 인해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지력 제공이나 안보 공약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란 점을 재차 확인했음.

- 이 대통령은 “핵확산과 핵테러리즘 방지에 기여하는 의지가 담겼다고 들었다. 동맹국들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고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지지 의사를 밝혔음.
- 이 대통령은 “최근 미국과 러시아의 신전략무기 감축협정 합의도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고 핵 안보정상회의 또한 핵물질 이전과 핵 테러리즘 방지를 위한 상징적 의미가 크다”며 “세계 모든 정상들이 국제공조를 통해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평가했음. 그러면서 “오바마 미 대통령이 힘든 여건속에서 의료보험 개혁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적지 않은 성과다. 미국민들에게 큰 혜택을 가져다줄 것으로 확신한다”고 축하했고, 오바마 미 대통령은 “이 대통령도 어려운 상황에서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다. 좋은 성과를 많이 거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음.
- 이날 두 정상의 전화통화는 미국의 요청으로 이뤄졌으며 두 정상은 지금까지 3차례 공식 전화통화를 통해 각종 현안을 논의하고 우의를 과시한 바 있음.

● 한미FTA 촉구 美순회행사 개시(3/31)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촉구하는 미국 순회 활동이 31일부터 시작됨. 한미 FTA재계연합과 한미경제연구소(KEI)가 주관하고 주미한국대사관이 후원하는 이번 활동은 11월 미 중간선거 이전까지 미 주요지역을 돌면서 개최될 예정이며 한미 FTA에 대한 지지여론을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음.
- 한덕수 주미대사는 태미 오버비 한미재계회의 미측 대표와 함께 31일부터 이틀간 앨라배마주 남부 모바일시 및 주 수도인 몽고메리시를 방문, 지역 정·관계 인사 및 상공인, 언론인 등과 잇따라 만나 한미 FTA의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임. 이번 활동은 4월 뉴욕, 5월 메릴랜드, 6월 워싱턴, 7월 미시간, 오키호, 일리노이, 8월 텍사스, 미주리, 9월 매사추세츠, 코네티컷주에서 계속될 예정임.

나. 한·중 관계

● 中연변, 한국인 연루된 北마약조직 검거(3/31)

- 중국 연변(延邊)조선족자치주 공안국은 한국인과 조선족이 연루된 북한 마약판매 조직을 검거했다고 흑룡강신문(黑龍江新聞)이 31일 보도했음. 연변 공안국 마약 수사대는 지난해 9월 조선족 김모씨가 북한의 ‘장 사장’으로부터 마약의 일종인 히로뽕을 사들여 칭다오(靑島)와 한국 등에서 판매한다는 첩보를 입수, 수사에 착수해 최근 차모씨를 비롯한 한국인 2명과 북한인 5명, 조선족 1명 등 모두 8명으로 구성된 마약조직을 검거했음. 또 이들로부터 히로뽕 740g 과 마



약 밀매자금 12만 위안을 압수했음.

- 公安국 수사 결과 두목인 장 사장을 비롯해 북한인 5명이 운송책임이 마약조직은 북한에서 들여온 히로뽕을 연변 화룡(和龍)시 난핑(南坪)진 등 북한과 중국 국경지대에서 조선족 김씨 등에게 넘겨 칭다오로 운반한 뒤 차씨 등 한국인 운송책을 통해 국내로 반입한 것으로 드러났음. 이들은 옌지(延吉) 등에서도 조선족들을 상대로 북한산 히로뽕을 공급해온 것으로 밝혀졌음.
- 신장(新疆)지역에서 활동하던 중국의 마약 조직들이 당국의 단속을 피해 지린(吉林)성으로 근거지를 옮겨 마약 원료를 대규모로 재배하면서 연변은 북·중 마약 밀매의 중계지로 부상했음. 지린에서 재배한 마약 원료를 북한에 보낸 뒤 완제품으로 가공된 마약을 들여와 중국과 한국, 일본 등 동남아시아지역으로 판매하고 있는 것. 지난해 연변에서 900여 명의 마약 사범이 적발된 데 이어 올해 들어서도 이미 68명의 마약 판매 사범이 검거되고 마약 4천 437g 이 압수됐음.

● 장신췌 주한 중국대사 부임(3/31)

- 장신췌 신임 주한 중국대사가 31일 정식 부임함. 외교 소식통은 “장대사가 오늘 오후 베이징을 출발해 인천공항에 도착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음. 장대사는 서울도착 즉시 중국 후진타오(胡錦濤) 주석이 수여한 신임장 사본을 외교통상부에 제출하고 추후 우리 정부와 일정협의를 거쳐 이명박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할 예정임.
- 1953년 상하이(上海)에서 출생한 장대사는 베이징외국어학원을 졸업한 뒤 미국 하버드케네디스쿨에서 연수했으며 2005~2007년 주아일랜드 대사를 역임했음. 그는 한때 1990년부터 1997년까지 중국 통신사인 신화사 홍콩분사에서 근무하기도 했음.
- 장대사는 영어에 능통하지만 한국어는 구사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대만과의 양안 관계에 정통한 것으로 전해졌음. 장대사는 중국 외교부의 최선임 국장급을 지낸 인물로 부국장급이었던 전임 주한 중국대사들보다 한 단계 급이 높아졌음.
- 그는 지난 17일 중국 상하이에서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을 영예수행한 바 있으며 당시 기자들에게 “百尺竿頭, 更上一樓(백척간두, 경상일루: 현재 최상의 관계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리겠다)”며 양국의 우호관계를 격상시키는데 주력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음.

다. 한·일 관계

● 한 “교과서에 대마도문제, 日 역사왜곡 기술”(4/1)

- 한나라당은 1일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의 독도영유권 명기사태와 관련, 맞대응 차원에서 대마도 영유권 문제, 일본의 역사왜곡, 과거 왜구의 침탈 등을 우리 역사교과서에 기술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음.



- 한나라당은 이날 국회에서 김성조 정책위의장,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당정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외교통상부에 요구했다고 황진하 제2정조위원장이 전했다. 황 위원장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일본이 교과서에 왜곡된 역사를 기술하고 있는 만큼 이에 상응해 우리도 일본의 역사왜곡과 거짓 주장을 교과서에 기재해야 한다”며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조해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한나라당은 이날 회의에서 ▲일본이 왜곡된 역사를 가르치고 있다는 점 ▲과거 왜구의 한반도 침탈 ▲대마도 영유권 문제 ▲독도가 우리 땅임을 입증하는 증거사료 등을 교과서에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 또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 ▲주거도시화 및 박물관 설치 ▲헬기장 확충 및 경비행장 착륙시설 설치 등 독도관광 활성화 ▲독도관련단체 지원확대 ▲독도의 모(母)섬이 울릉도라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 강화 등을 요구했다.
- 한나라당은 또 일본의 하토야마 민주당 정부가 ‘아시아 중시, 과거사 반성’이라는 기존정책에서 역행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조해진 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외교부의 대응은 일본의 기도를 막는데 별 효과가 없었고 문제만 더 악화됐다는 게 대다수 국민 생각”이라며 “적극적, 공세적 대응과 행동이 필요하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 조 대변인은 또 “일본이 도발할 때마다 군(軍) 독도주둔 등 다양한 조치를 실행에 옮기고, 독도·대마도문제, 일제침략을 교과서에 기술해 집중교육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역사상 우리의 영유권적 지배가 거론된 대마도에 대해선 실증자료를 근거로 사실을 규명하고 이슈화하는 작업을 본격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이에 대해 외교부는 관계부처와 협조해 반영할 내용은 최대한 반영하겠다면서도 ‘단호하고 차분하게 대처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 당과 온도차를 보였다.
- 유명환 장관은 “과거를 직시하면서 미래지향적 관계를 유지한다는 큰 틀을 유지하면서 독도영유권 침해 시도에 대해선 단호하고 차분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당지도부는 최고위원회의와 당정회의에서 한일관계에 대한 정부의 ‘조용한 외교’ 기조를 질타하면서 더 이상 조용한 외교는 통용될 수 없는 만큼 독도문제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외교부는 조용한 외교를 지향하고 있지만 이는 국민에게 설득력도 없어졌고, 조용한 외교는 더 이상 통용될 수 없다”며 “필요하다면 권철현 주일대사를 소환하고, 한국에 있는 일본대사도 귀국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 한편,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어 일본 정부의 초등교과서 독도영유권 명기를 철회하고 공식사과를 요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조했음.

- 친 대변인은 또 중·미 관계와 관련해 “관건은 서로 존중하고 평등하게 이익을 취하며 양국이 이미 체결된 3개 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도 타협을 통해 처리하면 건강하고 안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음.
- 중·미 양국은 올 들어 달라이 라마의 미국 방문, 미국의 위안화 평가 절상 압력, 무역마찰 등을 둘러싸고 갈등을 겪어왔으며 이 과정에서 중국 정부는 후 주석의 핵 안보정상회의 참석과 관련한 입장 표명을 미뤘음. 후 주석의 방미가 확정됨에 따라 이를 계기로 미·중 관계가 갈등에서 화해로 전환될 지 주목됨. 중국 정부는 후 주석의 방미를 통해 양국간 고조된 갈등을 누그러뜨리고 오는 5월 말로 예정된 제2차 미·중 전략경제대화에서 위안화 절상 문제 등의 양국 간 현안에 대한 접점을 찾는다는 계획임.
- 미·중 경제전략대화에는 중국 측에서 왕치산(王岐山) 부총리와 다이빙궈(戴秉國) 국무위원이, 미국 측에서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과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이 각각 참석함.
- 후 주석은 워싱턴 핵 안보정상회의 후 오는 14~17일 브라질·인도·러시아·중국 간 제2차 브릭스(BRICs)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브라질로 향함. 후 주석은 이어 17~18일 베네수엘라와 칠레를 차례로 방문할 예정임.

● 美·中 고위급 정당회의 첫 개최(4/1)

- 중국과 미국이 31일 베이징(北京)에서 첫 양국 정당 간 고위급 회의를 개최했다고 신화통신이 1일 보도했음. 이 자리에는 왕자루이(王家瑞) 대외연락부장 등 중국 공산당 대표와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국무장관을 비롯한 미국 민주·공화당 인사가 참석했음.
- 중국 측 대표인 왕 부장은 인사말에서 양국이 상호 신뢰를 높이고 양자관계를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양국의 각 정당과 정치인들이 이념과 사회시스템, 문화적 차이를 초월하고 편견을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왕 부장은 이어 긍정적이고 협력적이면서 포괄적인 21세기 중미관계 건설을 위해 양측이 전략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양자관계를 다루고 서로 존중하며 상대방의 핵심이익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그는 그러면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중심으로 한 중국 정당 제도와 중미관계를 포함한 국제문제에 대한 공산당의 입장을 설명했다. 이에 올브라이트 전 장관은 “미·중 양국 정당간의 정기적 교류 프로그램이 양자 대화에 더 많은 채널을 제공할 것”이라며 “이번 회의를 통해 전인대에 대해 더 많은 이해를 할 수 있기 바란다”고 화답했음.
- 공산당 대외연락부 초청으로 지난 30일 베이징에 도착한 미측 정당 대표단 18명은 오는 3일 출국할 예정임.



● 오바마 “중국과 긍정적 관계 원해”(3/30)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중국과의 긍정적인 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키기로 했다”고 백악관이 29일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장예수이(張業遂) 신임 주미 중국대사의 신임장을 받은 뒤 이같이 밝혔다. 로버트 기브스 백악관 대변인이 성명을 통해 밝혔다.
-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이 하나의 중국 정책과 대만해협을 둘러싼 마찰을 줄이려는 중국과 대만의 노력을 지지한다는 것을 거듭 확인했다”고 백악관은 전했다. 또 “미국과 중국이 핵확산 방지와 지속가능한 글로벌 균형 성장 등 중요한 세계적 이슈에 관해 국제사회와 협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고 백악관은 덧붙였다.
- 이에 대해 중국은 “중-미 관계를 증진시키려는 오바마 대통령의 긍정적인 태도에 찬사를 보낸다”며 친강(秦剛) 외교부 대변인의 성명을 통해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
- 친강 대변인은 “대만과 티베트 문제와 관련, 중국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재차 확인했다는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양국 관계는 위안화 문제,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인터넷 자유, 달라이 라마의 백악관 방문 등 많은 문제를 놓고 마찰을 겪어왔다.
- 중국은 지난주 “동등한 입장에서 대화와 협의”가 양국 간 긴장을 해소하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친강 대변인의 발언을 통해 관계 개선 의지를 표명한 바 있음.

마. 미·일 관계

● “후텐마, 미·일 협의 난항 예상”(3/29)

- 오키나와(沖繩)현의 주일미군 후텐마(普天間)비행장 이전을 둘러싼 미국과 일본의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NHK방송이 29일 보도했다. 일본의 오키나와(岡田克也) 외상은 이날 미국을 방문해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과 후텐마 이전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일단 잠정 조치로 오키나와현 나고(名護)시 캠프슈워브 육상부나 우루마시의 미군기지 화이트비치 연안부에 활주로를 만들어 후텐마 기지를 이전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단계적으로 헬리콥터 부대 등의 훈련시설을 가고시마(鹿兒島)현 도쿠도시마(徳之島)와 규슈(九州) 남부 섬 지역 등으로 분산해 후텐마 기능의 50% 이상을 오키나와 밖으로 이전한다는 구상이다.
- 하지만 미국은 후텐마 기지 기능의 분산은 훈련의 기동성과 효율성 등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주일 미군을 총괄하는 로버트 윌러드 태평양군 사령관은 지난 25일 기자회견에서 “해병대는 보병부대를 훈련장으로 수송하기 위해 헬리콥터 부대의 지원을 필요로 한다”고 말해 헬기 부대 등의 분산 배치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후텐마의 분산 이전 후보지로 거명되고 있는 섬 지역 주민들도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도쿠노시마 주민 4천200여명



은 28일 집회를 열고 미군기지 이전에 결사반대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음.

- 한편 오카다 외상은 게이츠 국방장관과의 회동에 이어 29일 G8 외무장관 회담이 열리는 캐나다에서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과도 만나 일본의 입장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방침임.

바. 미·러 관계

● “美·러 관계, 실질 협력 구체화 필요”(4/3)

- 미국과 러시아가 전력무기감축협정(START-1) 후속 협정을 마무리한 가운데 군축 외 다른 분야에서 협력이 구체화할지 주목됨. 러시아 안드레이 데니소프 외무부 제1차관은 2일(현지시간) 러시아 언론 매체들과 인터뷰에서 “미국과 러시아 관계는 구체적 프로젝트 토대 아래 세워져야 한다”고 밝혔음. 데니소프 차관은 최근 양자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자 미국을 방문, 정관계 인사들을 만나고 돌아왔음.
- 그는 “이번 미국 방문에서 작년 7월 모스크바 미·러 정상회담을 통해 구성된 ‘공동 대통령 위원회’는 우리가 양국 관계에서 만들려는 메커니즘에 분명히 긍정적 요인이 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면서 “앞으로 대화는 가시적인 내용물로 채워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데니소프 차관은 “위원회 산하 13개 실무 그룹들이 그간 필요한 메커니즘을 만드는 데 상당한 노력을 해 왔고 성과도 있었지만 이제 이 메커니즘을 구체적 협력 분야에 적용할 시기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기술 혁신 등을 포함해 러시아가 우선시하는 정책들과 관련된 분야에서는 구체적 논의가 더디게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모든 분야에서 미국과 동등한 파트너십을 기대할 수는 없는 만큼 우주탐사, 항공, 원자력 산업 등 우리가 경쟁력을 가진 분야에서 협력을 우선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한편, 양국은 지난달 26일 1년간의 협상 끝에 START-1 후속 협정을 타결하고 오는 8일 체코 프라하에서 두 나라 정상이 참석하는 가운데 협정 서명식을 할 예정이며 이는 양국 관계를 ‘리셋(재설정)’하는 데 새로운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러, 日교과서 영토문제 쟁점화 강력 반발(4/2)

- 러시아는 일본이 초등학교 교과서를 통해 영토분쟁을 쟁점화하고 있다며 강력 비난하고 나섰다. 안드레이 네스테렌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1일 일본 정부가 승인한 교과서에 남쿠릴열도(일본명 북방영토) 문제와 관련한 해법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면 일본의 계속된 영유권 주장은 양국관계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고 경고했음.
- 러시아와 일본은 남쿠릴 4개 섬을 놓고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으며, 지난해 7월 일본 의회가 이 지역을 일본 고유의 영토로 규정한 북방



영토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갈등이 더욱 깊어지고 있음. 네스테렌코 대변인은 “일본 측의 최근 움직임은 러시아와 관계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매우 민감한 사안을 전면에 내세우려는 의도를 보여준다”며 이번 교과서 개정이 특별조치법을 실행하려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 그는 쿠릴열도가 러시아 사할린의 일부라고 강조하면서 “(일본이) 근거 없는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은 일본과 쿠릴 간 정상적인 접촉은 물론 러·일 평화조약 체결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네스테렌코 대변인은 “일본 정부가 영토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접근법을 재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일본은 1905년 러·일 전쟁으로 북위 50도 이남의 사할린 4개 섬을 에토로후(擇捉), 구나시리(國後), 하보마이(齒舞), 시코탄(色丹) 등으로 칭하며 점령했으나 1945년 패망 후 옛 소련과 러시아가 이 지역을 실효 지배하고 있음.

사. 중·일 관계

● <中·日, 마약사범 사형으로 갈등 빛나>(3/31)

- 중국과 일본이 일본인 마약밀수범에 대한 사형집행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을지 주목됨.
- 중국은 최근 문제의 마약사범에 대한 사형을 집행한다고 일본 정부에 통보했고 일본 측은 사형이 집행되면 “일본 국민감정에 좋은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이라며 유감을 표시했음.
- 중국 정부는 2006년 8월 랴오닝(遼寧)성 다롄(大連)에서 마약밀수죄로 기소돼 사형 판결을 받은 일본인 아카노 미쓰노부(赤野光信, 66)에 대한 형 집행을 다음달 5일 실시하겠다고 29일 일본 정부에 통보했음. 중국이 일본인 범죄자에 대해 사형을 집행하는 것은 1972년 두 나라 국교정상화 이후 이번이 처음이 됨.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일본 총리는 30일 아카노에 대한 사형 방침을 통보받고 일본은 중국 정부의 조치를 주목해 왔다고 밝히고 “대단히 유감”이라고 중국 언론들이 31일 일본 언론을 인용·보도했음.
- 또 히라노 히로후미(平野博文) 일본 관방장관이 “이는 중국의 사범 문제”라면서 사형 집행 중지를 요구하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하면서도 그러나 일본 국민의 감정을 들어 사형 집행에 대한 불만을 간접적으로 표시했다고 전했다.
- 일본에서 마약밀수에 수차례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아카노는 2006년 4월 이후 중국 출입이 잦아지자 사범당국의 감시를 받아오다 같은 해 9월 다롄에서 히로뽕 마약 2.5kg을 일본 오사카로 밀반출하려다 검거됐음.
- 중국과 일본은 2008년 ‘형사상호협조조약’을 체결했으나 양국 간에는 아직 ‘형사범죄인도조약’은 체결되지 않았음. 앞서 중국은 작년



12월 영국과 국제사회의 선처 호소를 무시하고 마약 밀매 혐의를 받던 영국인 아크말 샤이크(53)에 대한 사형을 예정대로 집행, 중·영 관계가 한때 냉랭해졌음. 당시 영국은 고든 브라운 총리가 직접 중국을 강하게 비난했고 중국 정부 역시 내정간섭을 중단하고 영국은 이성적으로 대처하라면서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정면대응했음.

아. 기타

● “IAEA, 이란 우라늄농축 부품 확보경로 조사”(4/3)

- 이란이 우라늄 농축 관련 부품을 중국 기업을 통해 조달했을 가능성이 3일 제기됐음. 월트리트저널(WSJ)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서방국 정보기관들이 이란이 우라늄 농축에 필요한 밸브와 진공계 등 핵심부품을 어떤 경로로 확보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이날 보도했음. 이번 조사는 IAEA가 올 1월14일 받은 이메일 제보로부터 시작됐음.
- 제보자는 불법적인 화물이 중국 기업의 중개인을 경유해 비밀리에 이란으로 운송되고 있다고 증언했음. 이란 기업 ‘JMT’가 중국 윈저우에 본사를 둔 진저우 그룹의 자회사를 대리하는 중개인을 통해 우라늄 농축에 필요한 밸브를 확보했다는 내용도 포함됐음.
- IAEA의 이번 조사에 정통한 익명의 관계자는 이란이 최근 2년간 10여 차례에 걸쳐 우라늄 농축에 필요한 밸브를 구입하려 했다면서 이 같은 시도 중 일부는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 이 장비는 미국의 타이코인터내셔널이 지난해 12월까지 소유했던 프랑스 기업이 제작했음. 양 사는 이 같은 보도내용에 대해 “아는 바 없다”고 답변했음.

● “中, 2012년 첫 항공모함 운용할 듯”(4/1)

- 월러드 사령관은 지난주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에 참석, 중국이 1998년 우크라이나에서 도입한 옛 소련의 퇴역 항공모함인 바라그(Varyag)호를 개조해 2012년께 실전 배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고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SCMP)가 1일 보도했음.
- 월러드 사령관은 또 중국이 본토로부터 수백 마일 떨어진 곳에 위치한 항공모함을 공격할 수 있는 신형 대함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군 고위관계자가 중국의 항공모함 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발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덧붙였다.
- 군사 전문가들과 외교 소식통들은 중국이 옛 소련 시절 건조한 쿠즈네초프급 항공모함인 바라그호를 우크라이나로부터 도입해 랴오닝(遼寧)성 다롄(大連) 조선소에서 새로운 항공모함으로 개조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하고 있음.
- 바라그호의 엔진 개조작업이 완료됐는지 여부는 불확실하지만 비행갑판과 상부구조물에 대한 개조는 거의 마무리 된 것으로 알려졌다.



- 중국은 대양해군으로 도약한다는 목표 아래 바라그호를 개조해 운용한 뒤 자체 기술로 새로운 항공모함을 건조, 2015년께 실전에 배치할 것으로 보인다고 군사 전문가들은 전망했음. 바라그호는 5만8천600t급으로, 갑판의 길이가 302m에 달하며, 최대 속력은 29노트임. 또 1천960명의 승무원이 승선하고 비행기 52대를 탑재할 능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한·러, 참사로 동병상련.. 수교행사에도 영향>(3/30)

- 올해 수교 20주년을 맞은 한국과 러시아에서 사흘 간격으로 국가적 참사가 잇따라 일어나 양국이 서로를 위로하는 한편 예정된 수교 관련 행사들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심하고 있음. 30일 주러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내달 1일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수교 20주년 개막 전야제와 다음날 개막식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천안함 침몰 사고로 참석하지 못하게 됐음. 알렉산드르 아브데예프 러시아 문화부 장관의 참석도 불투명해졌음.
- 애초 양국 문화장관이 개막행사에 나란히 참석해 양국 대통령이 전하는 수교 축하 메시지를 낭독하는 등 우의를 다질 예정이었음. 유 장관은 또 아브데예프 장관에게 ‘한·러 문화 포럼 창설을 제의할 예정이었음. 그러나 천안함 사고로 전 행정기관이 비상 근무에 들어가 각료의 해외 출장이 어렵게 됐음. 우리 측은 유 장관의 행사 불참에 대한 양해를 구하고 신재민 제1차관을 참석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 반면 러시아는 모스크바 지하철 테러로 비상이 걸린 상황임. 개막식에 상원의장, 대법원장, 연방보안국(FSB) 차장, 이민청장, 모스크바 시장, 외무 차관 등 러시아 정·관·재계 유력 인사들이 대거 초청됐으나 테러 수습 때문에 이들 중 상당수가 불참할 것으로 예상됨.
- 수교 20주년 행사는 지난 2008년 9월 모스크바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올해를 ‘한국의 해’와 ‘러시아의 해’로 각각 지정해 기념하기로 합의하고, 지난해 3월 양국 문화장관이 정부 간 문화 교류 계획서에 서명하면서 구체화했음.
- 앞서 전날 모스크바에 열린 한·러 차관급 전략대화에서 신각수 외교 통상부 제1차관은 안드레이 네니소프 러시아 외무부 제1차관에게 테러 참사에 대해, 네니소프 차관은 천안함 침몰 사고에 대해 각각 유감과 위로의 뜻을 전달했음.
- 한편, 30일 오후 이윤호 주러 대사는 전날 테러가 일어난 모스크바 지하철 역 중 하나인 빠르크 꼴뜨리 역을 찾아 추모단에 헌화하고 희생자와 그 유족을 위로했음.

● 한·러 차관급 전략 대화.. 협력 증진 확인(3/29)

- 한국과 러시아 간의 두 번째 차관급 전략 대화가 29일 모스크바에서 열려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토대로 한 교류 협력을 증진해 나가기로 합의했음.



- 신각수 외교통상부 제1차관은 이날 러시아 외교부 영빈관에서 안드레이 데니소프 러시아 외교부 제1차관과 대화한 후 한국 특파원단과 만나 양국 대표가 양자 현안은 물론 동북아, 아시아·태평양, 유엔 등 범세계적 이슈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 교환을 했다고 밝혔다.
- 양국 차관은 이날 한·러 수교 20주년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올 상반기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리는 첫 한·러 대화에 내실화를 기하자는데 동감했으며, 6자회담을 포함한 북핵 문제와 아프가니스탄 및 파키스탄 안전 문제, 이란 핵 프로그램, 테러리즘, 국경을 넘나드는 범죄 등 다양한 국제 현안들에 대해 협의했음.
- 특히 신 차관은 대화에 앞서 이날 오전 발생한 모스크바 지하철 연쇄 폭탄 테러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으며, 데니소프 차관 역시 26일 서해 상에서 발생한 천안함 침몰 참사와 관련해 위로의 말을 건넸다고 회의에 참석한 우리 외교 소식통이 전했다.
- 또 최근 러시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연수생과 유학생 피습 사건에 대해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한편 조속한 사건 해결을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음.
- 신 차관은 이어 블라디미르 나자로프 안보회의 부서기를 면담하고 오는 11월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 문제와 한·러 경제 협력, 북한 핵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음. 신 차관은 또 콘스탄틴 로모단노브스키 이민청장을 만나 러시아 내 고려인 국적 취득과 관련 러시아 정부의 협조를 요청했으며 양국 간 경제 협력 관계 심화를 위해 러시아에서 활동 중인 우리 기업들의 노동 허가과 체류 허가를 쉽게 하는 ‘한·러 한시적 고용에 따른 근로 협정’을 제안했고 러시아 측으로부터 긍정적 답변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 신 차관은 “양국의 상호 보완적 경제 구조를 바탕으로 협력을 심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수교 20주년을 계기로 양국 관계에서 구체적 성과물을 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양국 전략 대화는 지난 2008년 9월 모스크바 한·러 정상회담 결과 마련돼 같은 해 12월 1차 대화가 서울에서 열렸고 지난해 11월 2차 대화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양국 사정으로 미뤄졌음. 3차 전략 대화는 올 하반기 서울에서 열릴 예정임.
- 앞서 신 차관은 24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차관급 정책협의회를 열고 지난해 7월 양국 정상이 합의한 ‘한·이탈리아 비즈니스 포럼’ 창설 문제에 대해 협의했음. 그는 이어 스페인을 방문, 신재생에너지 분야 협력 방안과 수교 60주년 기념행사, 한·EU(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FTA) 기본협정의 조속한 서명을 위한 협력 방안 등을 협의했음.